

온실가스 40% 감축은 가능할까?

2030 기후 오디세이: 차이와 반복

2025. 7. 2.(수) 오후 7시, 노무현시민센터 다들려강의실

인사말: 박창규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좌장: 류민 민중언론 참세상 기자

발표

1. 2030 기후 오디세이, 전환 정치의 지형도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 새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
-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팀장
3.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
4. 정의로운 전환의 공공성: 공공재생에너지 전략
-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2030 기후 오디세이, 전환 정치의 지형도

2025. 7. 2.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들어가며

- ❖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에너지·기후 정책 방향에 일정한 변화가 예상됨. 새정부의 대선 정책공약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의 ‘기후위기 대응’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연속성을 밝힌 것으로 평가됨.
- ❖ 그러나 한편으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제안한 개혁 과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다른 한편, 에너지·기후 시민사회 진영 내에서도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개념을 수용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향성과 방법론 측면에서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발견됨.
- ❖ 이런 배경에서 새정부 5년이 끝나는 해, 온실가스 40%를 감축해야 하는 해, 2030년 기후 오디세이를 헤쳐 나갈 전략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 <2030 기후 오디세이: 차이와 반복>를 마련함.
- ❖ 2031년 이후 계획 및 전망 이상으로 2025~2030년 정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정부의 정책 맥락과 최근 이슈 및 대안(공공재생에너지, 핵발전, 지역간 발전·소비의 불균형 및 전력계통, 기후시민의회, 개헌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기대함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파리협정 1차 NDC('21~'30)					파리협정 2차 NDC('26~'35)						
					19대 대통령(문재인)			20대 대통령(윤석열)			21대 대통령(이재명)					
				20대 국회		21대 국회			22대 국회			23대 국회				
				민선7기 지자체			민선8기 지자체			민선9기 지자체						
<<< 구 체제(6공화국)														신 체제(7공화국) >>>		

참고: How Do Right-Wing Populist Parties Influence Climate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Lockwood & Lockwood, 2022)

N개의 기후정의선언(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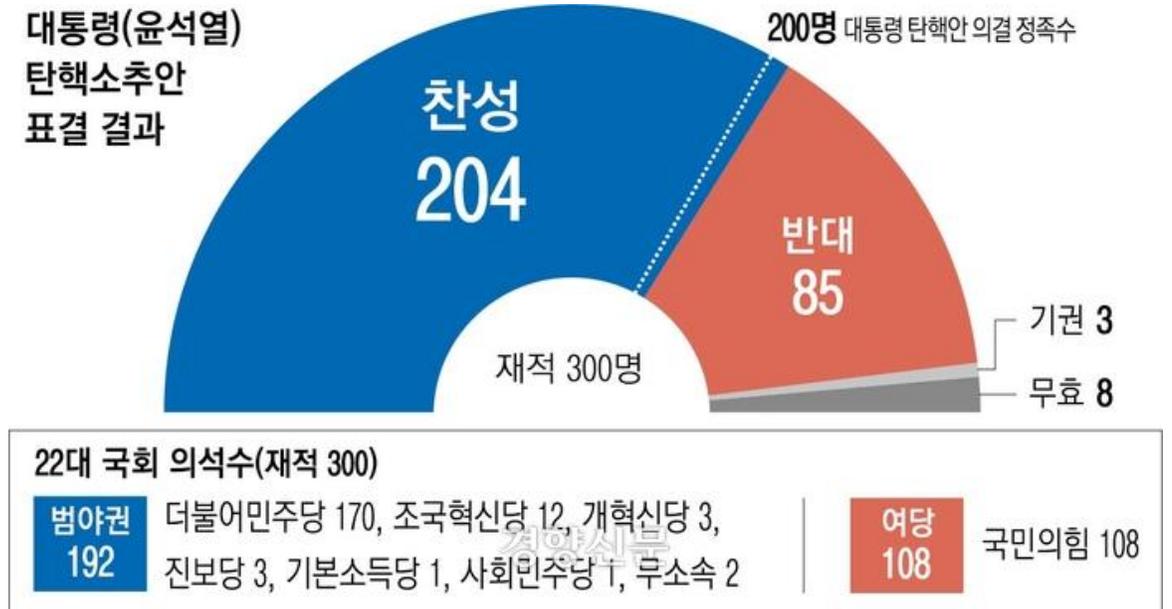


공동선언문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선언	8
N개의 기후정의선언들	
기후정의 × 평등과 존엄	18
기후정의 × 문화의 전환	24
기후정의 × 예술활동	30
기후정의 × 청소년인권	38
기후정의 × 탈시설과 돌봄	50
기후정의 × 노동자건강권	56
기후정의 × 불안정노동철폐	60
기후정의 × 건강정의	68
기후정의 × 재생산정의	74
기후정의 × 공공교통	80
기후정의 × 주거권	86
기후정의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92
기후정의 × 농어업 이주노동자 인권	98
기후정의 × 국제연대	104

장면 1 _ 국회의 기후위기 결의안 VS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자료: 뉴스1, 국회 본회의의 넘는 기후위기 결의안, 2020. 9. 24.



경향신문,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 국민의힘 '12명 이탈', 2024.12.14

장면 2 _ 국가 기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판단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대통령)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1.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직·간접적으로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양상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의 고용, 노동조건,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적응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IPCC 제6차 평가보고서(2022년)에서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2030년 이후의 감축목표도 설정하여 미래세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 표명(20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①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이 법률조항은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며[헌법불합치(계속 적용), 전원일치], ② 위 감축비율을 ‘40퍼센트’로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기각, 전원일치], ③ 정부가 2023. 4. 11.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부문별 및 연도별 배출·흡수량의 목표치를 설정한 ‘V. 중장기 감축 목표’ 가운데 ‘나. 부문별 감축목표’ 부분 및 ‘다. 연도별 감축목표’ 부분[이하 ‘이 사건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며[기각, 재판관 4(기각): 5(위헌확인)] ④ 나머지 심판청구와 공동심판참가 및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각하, 전원일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24. 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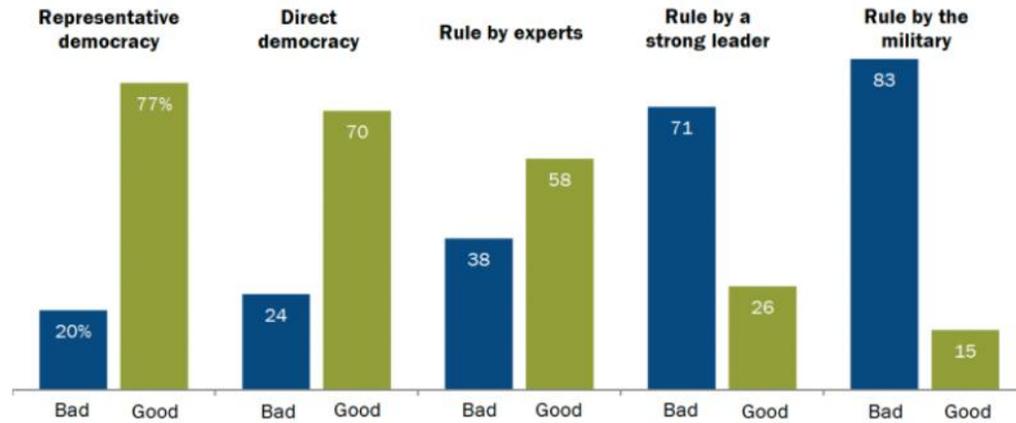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민주주의 위기(비관론) & 선거 독재국가(electoral autocracy) ...

❖ 24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 분포(2023년)

Support for different types of government across 24 nations

% who say each of the following would be a *good/bad* way of governing their country



Note: Those who did not answer are not shown. Percentages are medians based on 24 countries. Full question wording for political systems: Representative democracy, "A democratic system where representatives elected by citizens decide what becomes law"; Direct democracy, "A democratic system where citizens, not elected officials, vote directly on major national issues to decide what becomes law"; Rule by experts, "Experts, not elected officials, make decisions according to what they think is best for the country"; Rule by a strong leader, "A system in which a strong leader can make decisions without interference from [country-specific legislative body; e.g., parliament or Congress] or the courts"; Rule by the military, "The military rules the country."
Source: Spring 2023 Global Attitudes Survey, Q42a-e.
"Representative Democracy Remains a Popular Ideal, but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ritical of How It's Working"

Confidence in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declined in several nations

% who say a democratic system where representatives elected by citizens decide what becomes law would be a *very good* way of governing their country

	2017	2023	Change
	%	%	
Sweden	54	41	▼13
Kenya	42	29	▼13
Canada	43	31	▼12
UK	43	31	▼12
Nigeria	48	37	▼11
Germany	46	37	▼9
India	44	36	▼8
Netherlands	42	34	▼8
Japan	22	14	▼8
Italy	29	23	▼6
Mexico	9	15	▲6
Poland	20	33	▲13
Brazil	8	21	▲13

Not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over time are shown. Source: Spring 2023 Global Attitudes Survey, Q42b.
"Representative Democracy Remains a Popular Ideal, but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ritical of How It's Working"

Technocracy has gained support in most countries surveyed since 2017

% who say a system in which experts, not elected officials, make decisions according to what they think is best for the country would be a *good* way of governing their country

	2017	2023	Change
	%	%	
Greece	31	56	▲25
Mexico	53	73	▲20
India	65	82	▲17
Germany	44	61	▲17
Italy	40	57	▲17
Spain	49	65	▲16
Sweden	40	55	▲15
South Korea	52	66	▲14
Kenya	48	62	▲14
Hungary	68	80	▲12
UK	42	54	▲12
Brazil	31	43	▲12
South Africa	53	63	▲10
Japan	49	59	▲10
Indonesia	59	67	▲8
Poland	50	58	▲8
Argentina	46	54	▲8
Canada	41	49	▲8
Netherlands	39	45	▲6

Not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over time are shown. Source: Spring 2023 Global Attitudes Survey, Q42d.
"Representative Democracy Remains a Popular Ideal, but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ritical of How It's Working"

In several countries, significant increases in support for autocracy

% who say a system in which a strong leader can make decisions without interference from parliament or the courts would be a *good* way of governing their country

	2017	2023	Change
	%	%	
Mexico	27	50	▲23
Kenya	39	52	▲13
India	55	67	▲12
South Korea	23	35	▲12
Argentina	17	27	▲10
Poland	15	25	▲10
Germany	6	16	▲10
Brazil	27	36	▲9
Sweden	9	5	▼4
Israel	25	19	▼6
Italy	29	20	▼9
Hungary	24	15	▼9

Not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over time are shown.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body in the question differs by country. For example, the question asks "Congress" in the U.S. Source: Spring 2023 Global Attitudes Survey, Q42c.
"Representative Democracy Remains a Popular Ideal, but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ritical of How It's Working"

국내외 기후정치와 거버넌스 전망

❖ 잠정적 사회 형성 (Wainwright & Man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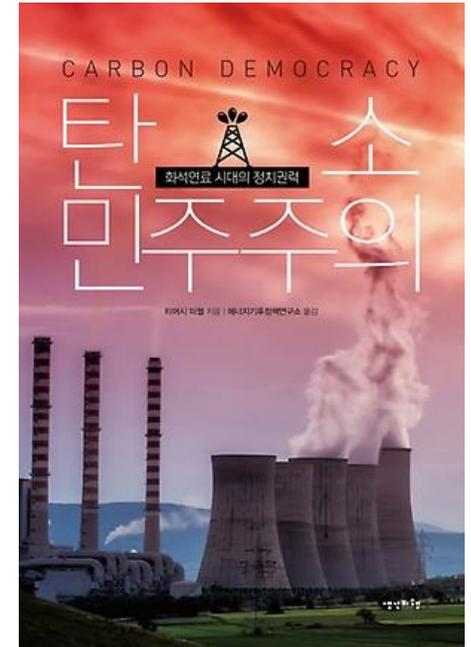
	행성적 주권	반행성적 주권
자본주의적	기후 리바이어던(Climote Leviathan)	기후 베헤모스(Climote Behemoth)
비자본주의적	기후 마오(Climote Mao)	기후 X(Climote X)

❖ 잠재적 미래 모습 (브렛 킹과 리처드 페티,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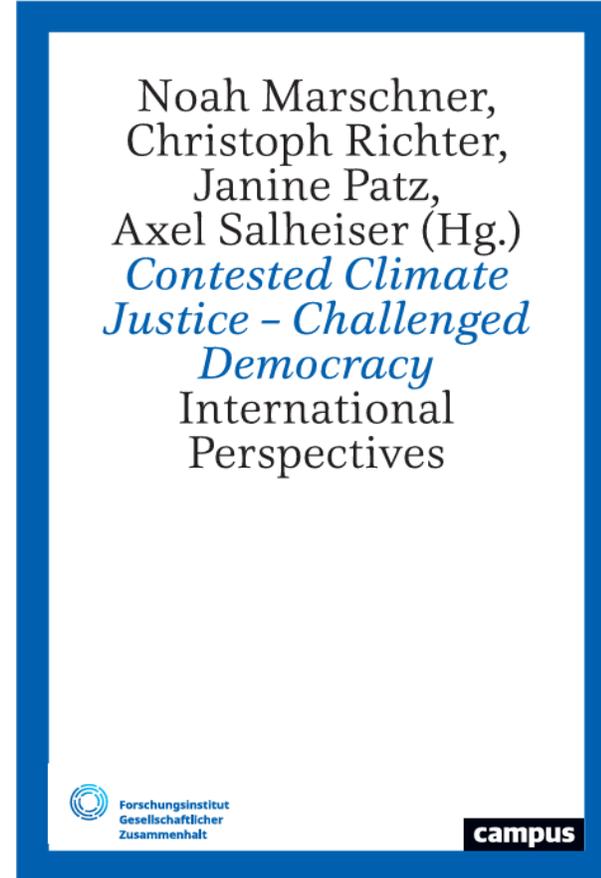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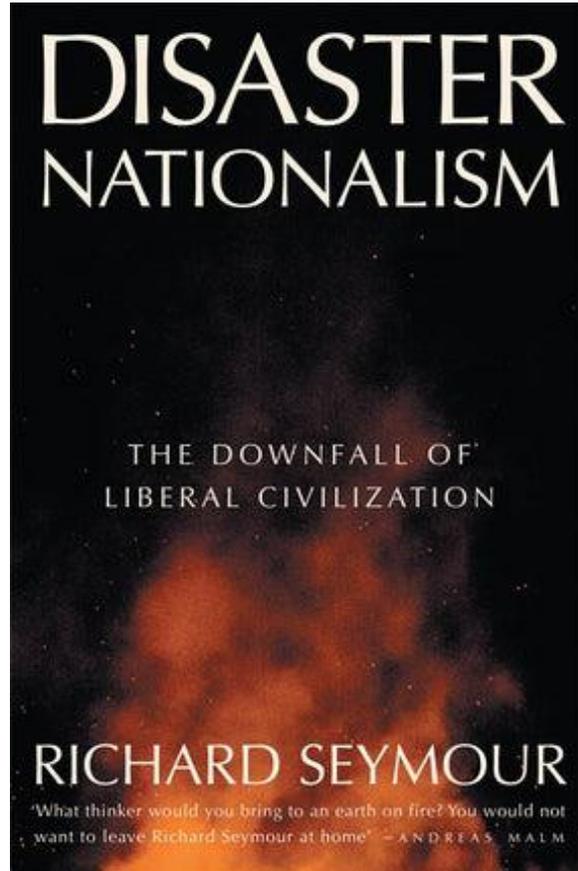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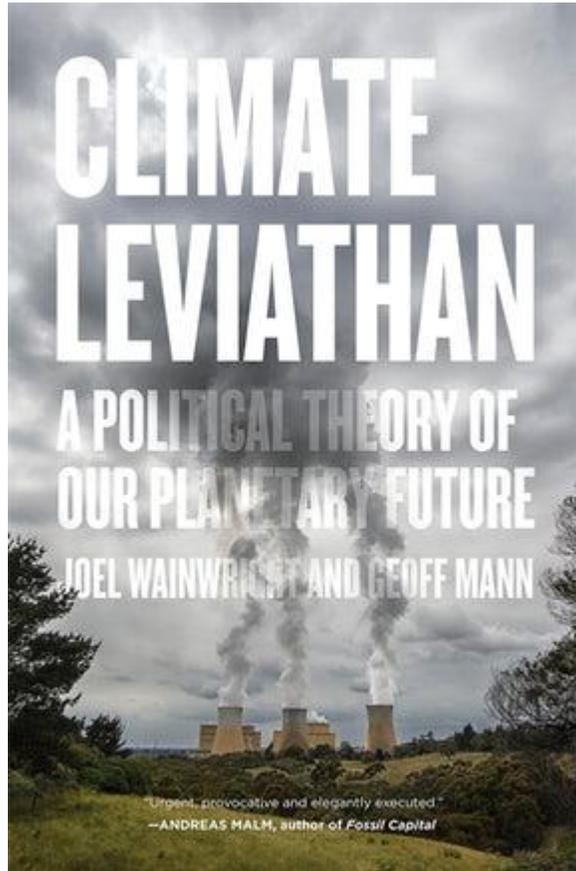
	혼란스런 미래	질서정연한 미래
포용적, 집단적	루디스탄(Ludistan)	테크노소셜리즘
배타적, 분열적	페일디스탄(Failedistan)	신봉건주의

❖ 기후위기와 AI 시대 (마크 코켈버그, 2023)

높은 가능성	혁명과 권위주의(그린 리바이어던)	불충분한 변화와 재앙(종말론)
낮은 가능성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기후 공산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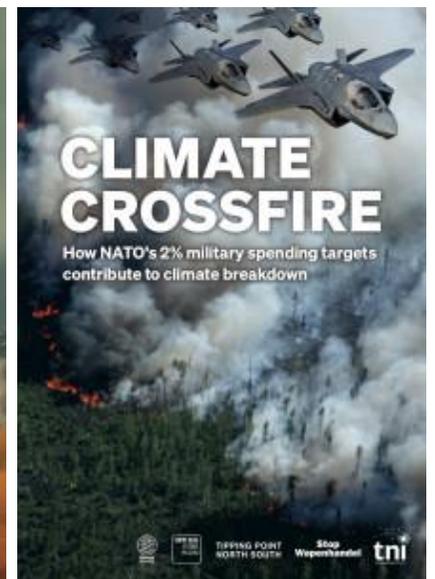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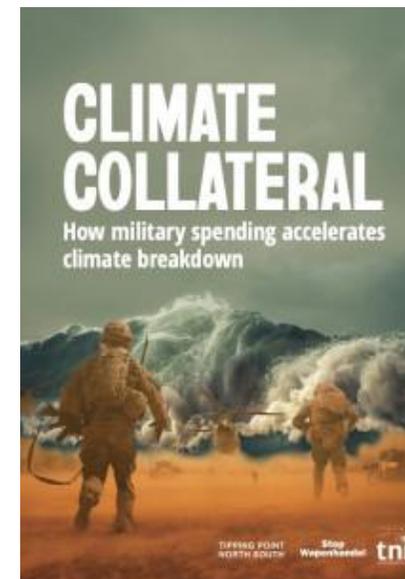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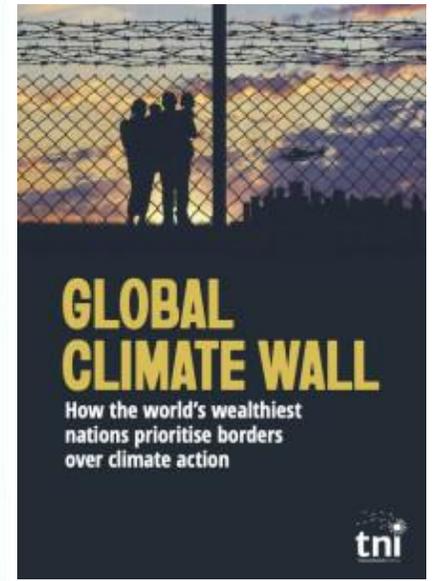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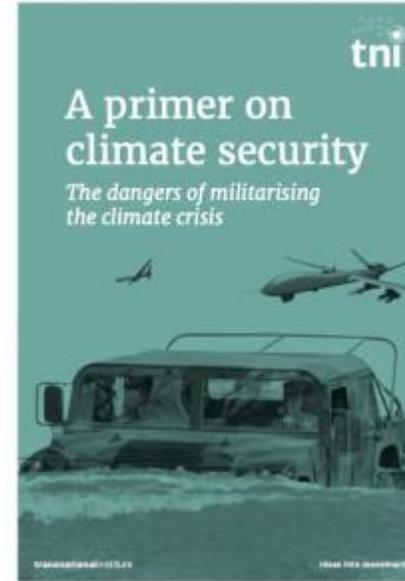


기후위기 시대의 에코파시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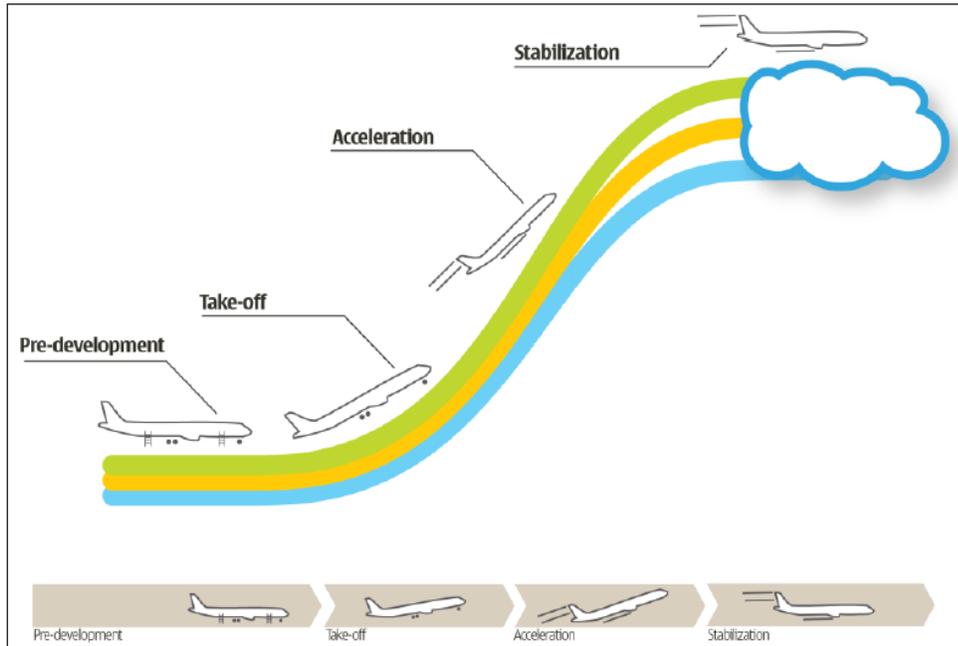
기후안보와 기후평화

- ❖ 2009년, 유엔은 ‘기후변화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적, 국제적 갈등을 증가시키고, 기존의 다양한 문제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영향, 적응, 취약성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갈등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단언할 수 없지만, 기후 변수와 함께 다른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림. 신중하게 포장된 이 표현을 달리 말하면, 기후변화는 국가 간, 국지적 분쟁을 심화시키고, 반대로 폭력적 분쟁은 기후변화(의 취약성)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임
- ❖ 이런 문제 의식에서 UN와 WEF 등 기후변화는 위험 증폭(threat multiplier/crisis multiplier)으로 인식함
- ❖ 전통적 군사력/군사주의(hard security/power)의 반인간적, 반생태적 문제에 대한 대안 필요
 - 인간안보(human security)/연성안보(soft security) 접근 제안. 또한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신흥평화(emerging peace)도 등장(김상배 외, 2023)
 - 기후안보는 군사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안보이기 때문에 기후정의 입장과 상충함. 따라서 기후위기를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프레이밍하는 것 자체가 문제(Sigwalt, 2020).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특히 권위적 민족주의와 만날 경우, 국제협력을 저해하게 될 우려(Aronoff, 2022). 참고로 경성에너지시스템 역시 국가 안보와 연결시켜 국가주의적 담론으로 방어함(securitization)(Johnston et a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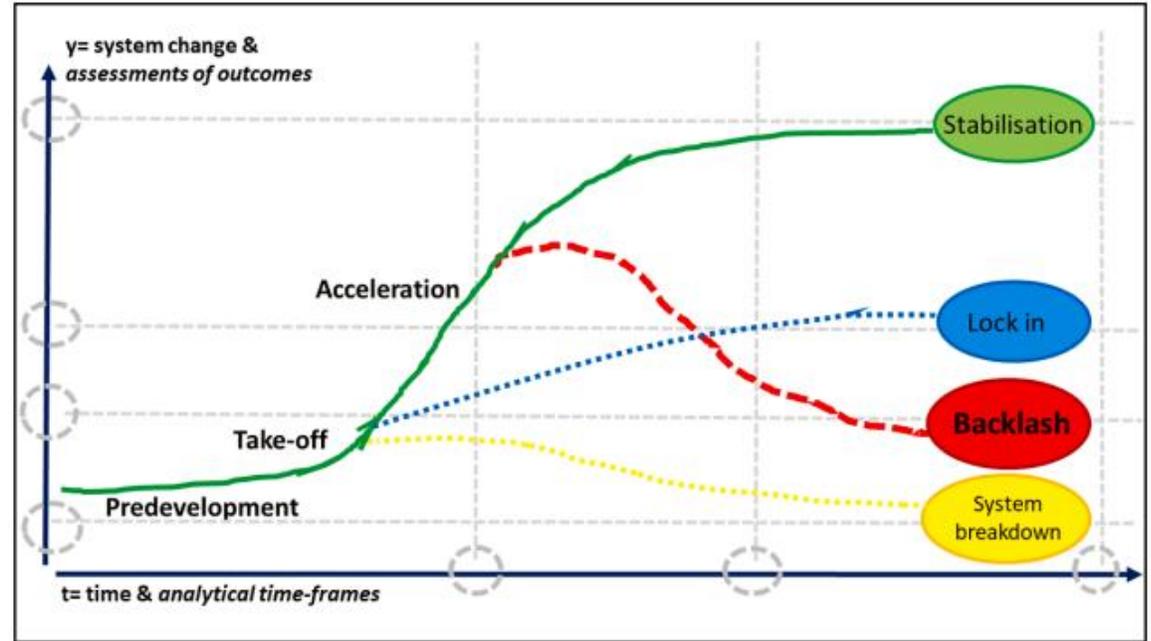
탈탄소 에너지시스템 전환 단계와 동학

❖ 탈탄소 에너지전환 단계



자료: Laes et al.(2014)

❖ 시스템 전환 동학과 백래시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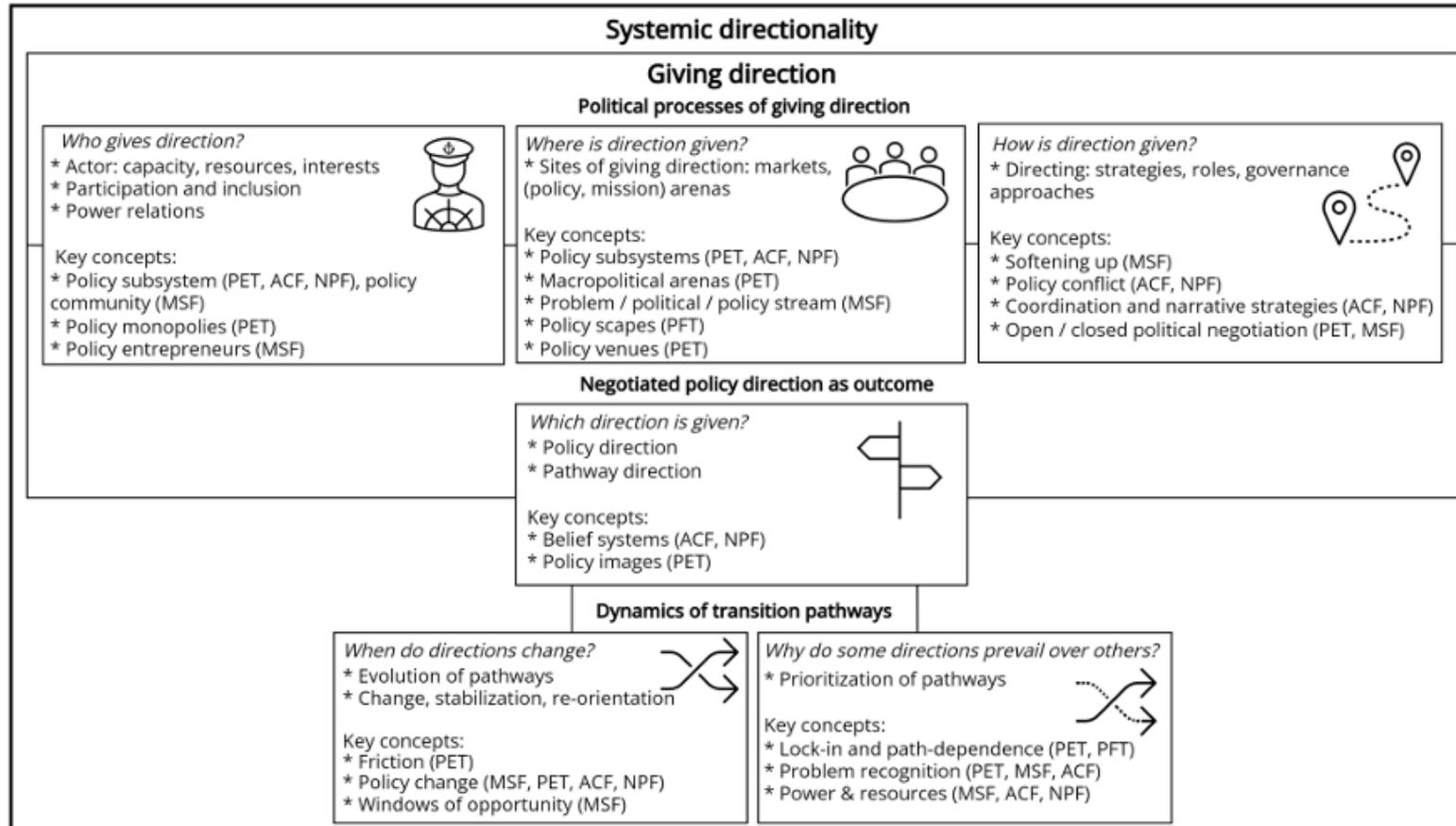


자료: Pel(2021)

- 전환과정에서 전환계곡(valley of transition) 발생 당면,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논쟁, 부정적 영향/취약 집단 피해, 법제도/정책수단 쟁점, 기득권 저항 등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전환관리(transition management)를 융합하여 정의로운 전환관리(just transition management) 개념 도입(Goddard·Farrelly, 2018; Caughman, 2020), 전환실패 사전예방 및 전환과정에 대한 참여계획 추진(Turnheim and Sovacool, 2020; Pel, 2021) 중요
- 이와 유사하게 정의로운 전환과 정의로운 설계(design for transitions) 개념을 접목할 수 있는데, 정의로운 설계는 사회적 혁신을 위한 사회적 실천과 구상으로 지배적 비전에 맞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관련 포괄적, 재구성적, 정치적, 동원적 개입을 의미함(White, 2019)
- 특히 탈성장 계획(degrowth planning) 또는 계획적 전환(planned transition)의 목표는 (1) 한계선과 우선순위 설정, (2) 민주적 참여 보장, (3) 노동의 재조직화와 노동시장 개편, (4) 생산방식과 경제구조 개편, (5)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 관리이며, 이를 통해 사회-생태적 조정(social-ecological coordination)이 강조됨(Durand et al,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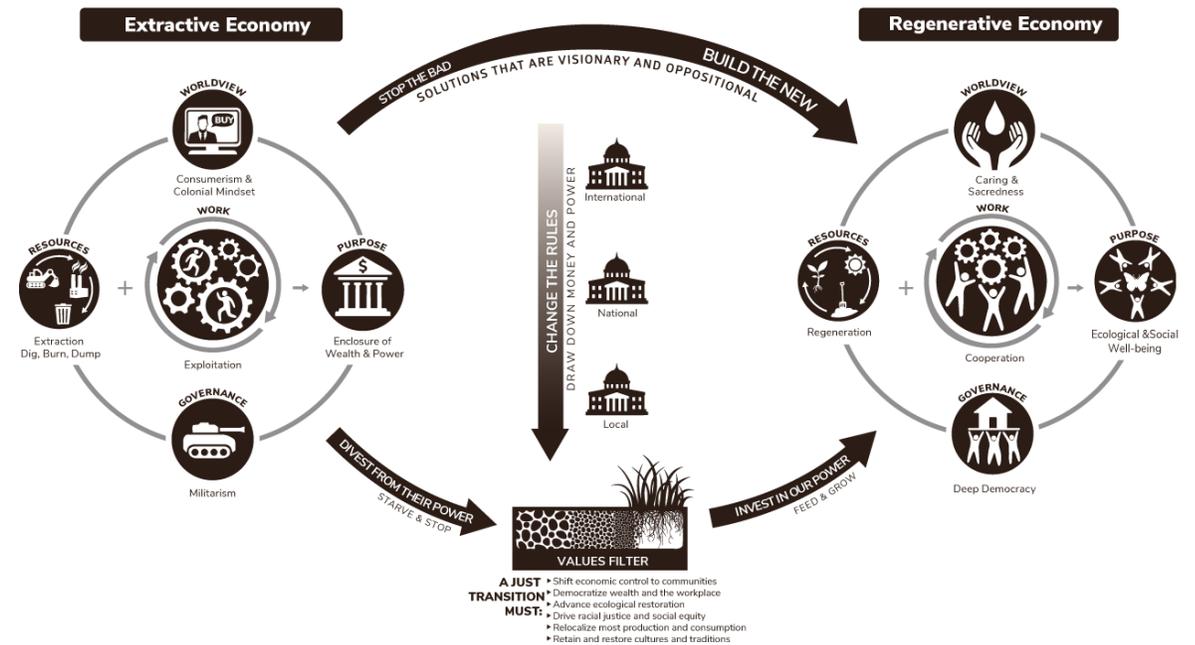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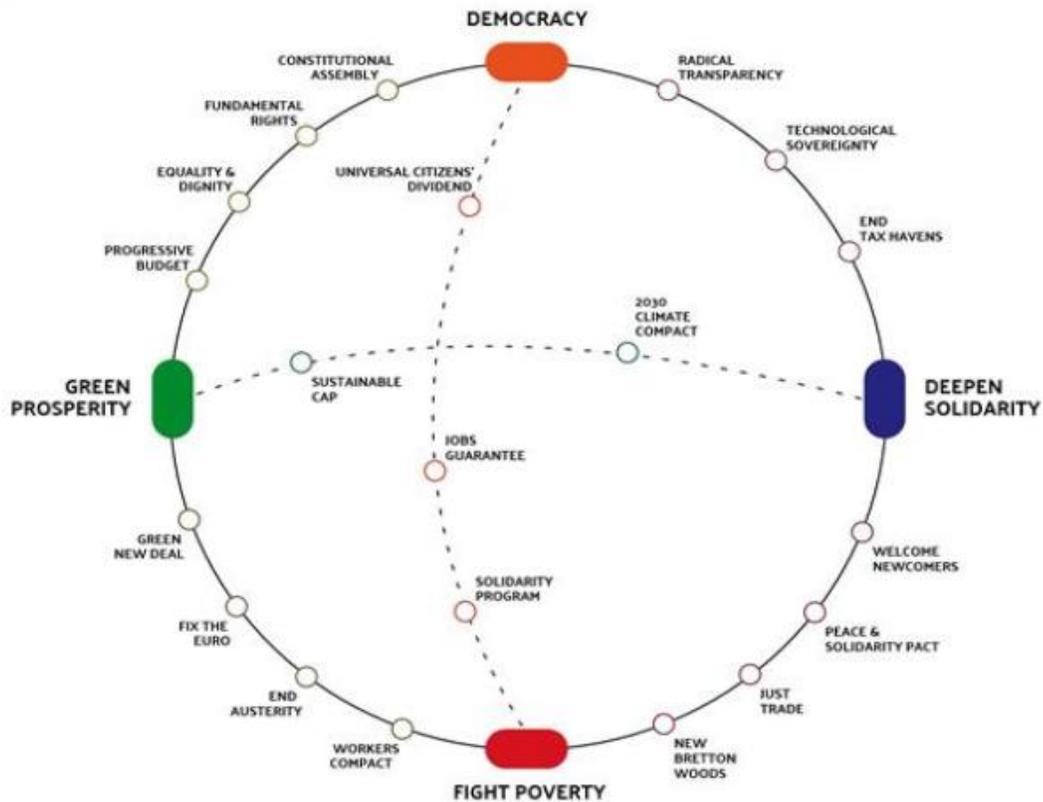
전환의 방향성과 다층적 의미

- ❖ 전환의 속도, 폭, 깊이, 그리고 이들 사이의 긴장과 상호작용(Andersen et al., 2023)
- ❖ 전환의 목표, 부문, 방식(Andersson & Hellsmark, 2024)
- ❖ 정치의 고전적 정의(who gets what, where, when, how, and why) 재해석(de Graaff et al., 2025)



녹색전환 전략 구상

- ❖ A Blueprint for Europe's Just Transition, 일종의 '탈성장 지향 그린뉴딜' 종합구상 (The Green New Deal for Europe, 2019)
- ❖ Climate Justice Alliance, 정의로운 전환/기후정의 설계('추출경제'에서 '생성경제'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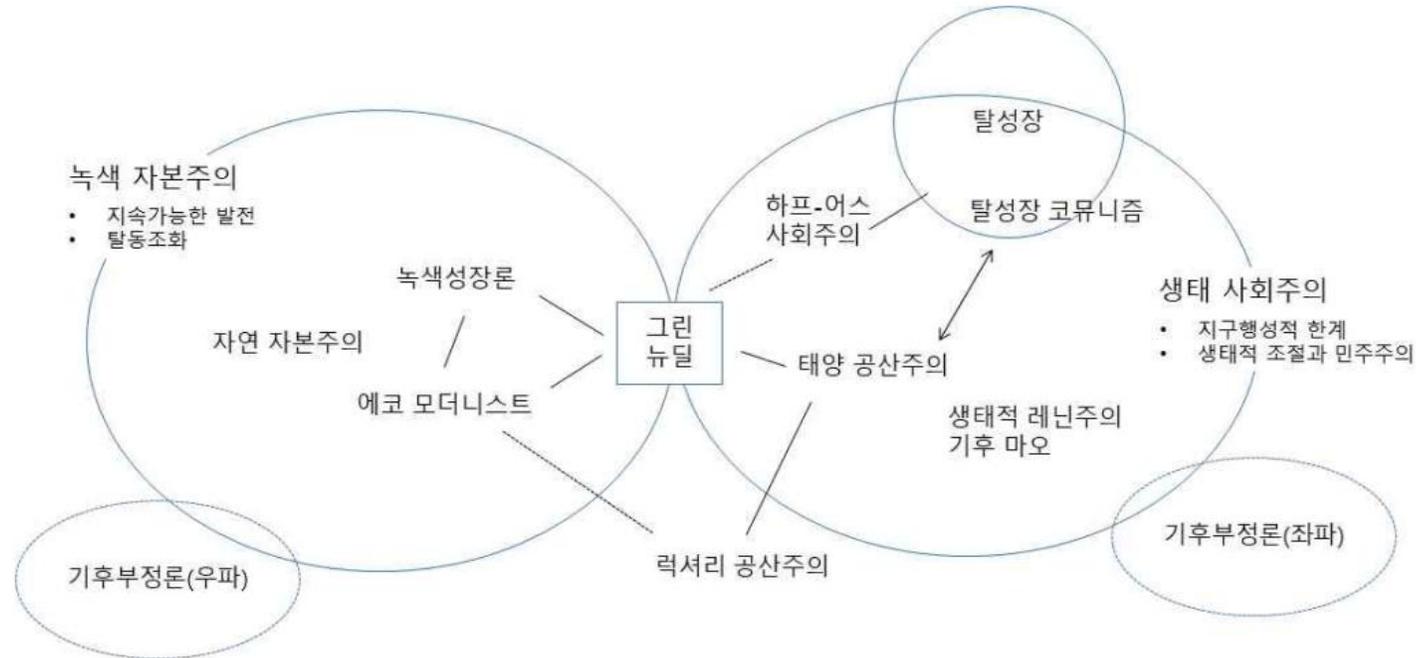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Spring; Democracy in Europe Movement 2025(DiEM25)

자료: Climate Justice Alliance(<https://climatejusticealliance.org>)

잠정적 미래 선택지 구상과 이념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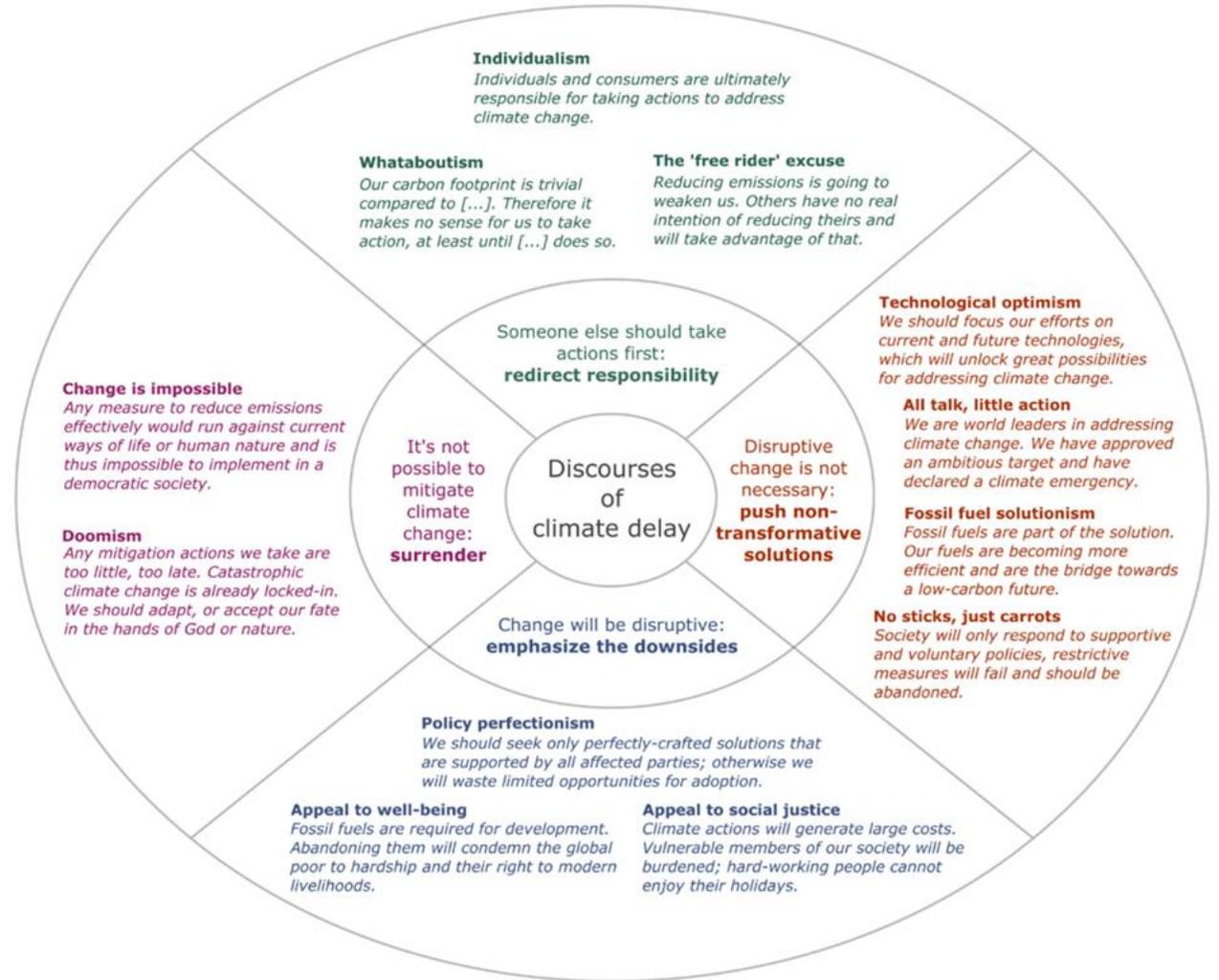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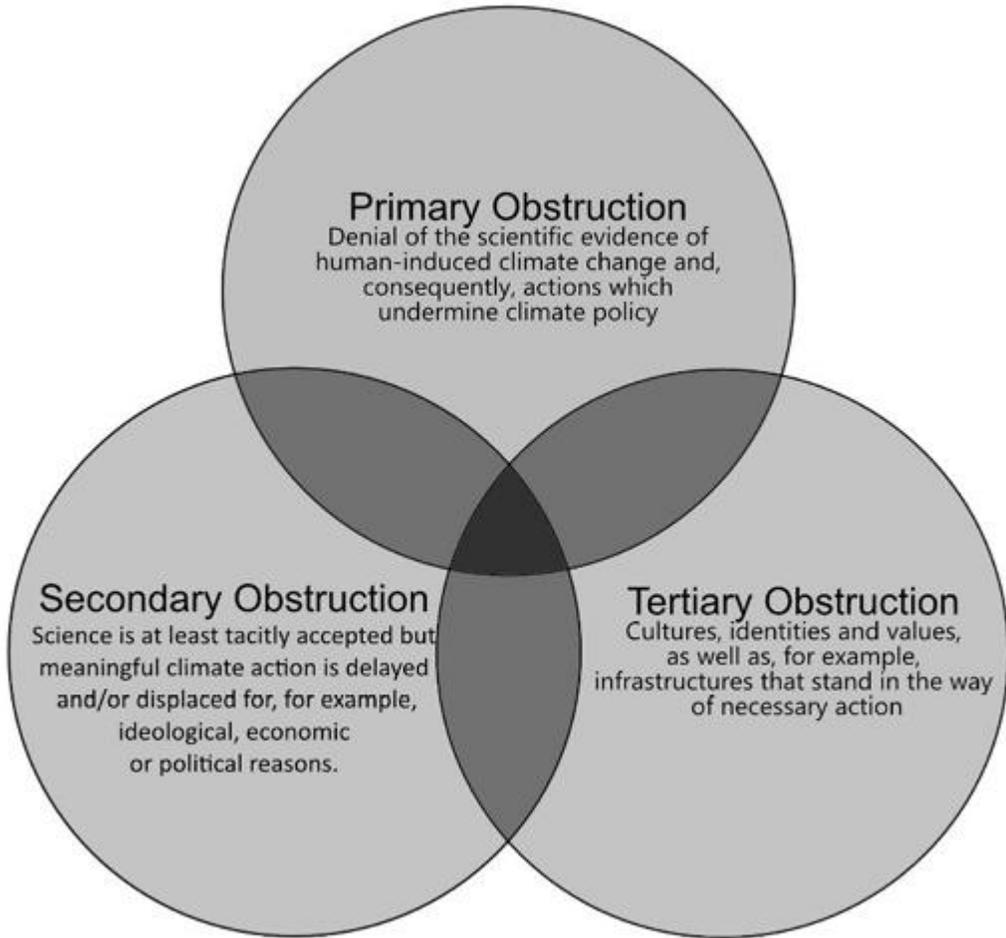
❖ 복합위기라는 비상사태/예외상태에서

- 최악의 시나리오(기후 파시즘/야만상태)와 근거 없는 낙관주의(탈동조화 decoupling 녹색자본주의/럭셔리 공산주의) 사이에서 선 ‘인류세’/‘자본세’, ‘이론과 현실의 간극’과 ‘운동과 정치의 격차’ 속에서 전환동맹의 가능성 탐색
- ‘보호 중심 사회주의’/‘사회보호주의’(제르바우도, 2022), ‘녹색 민주주의 혁명’/‘좌파 포퓰리즘’(무폐, 2022), ‘생태 사회주의적 민주 공화국’(장석준),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플레이저, 2023), ‘급진 민주적 실험주의’(장훈교, 2021) 등 참고



기후위기와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김현우, 2023)

기후 방해(Climature Obstruction)와 기후 지체(Climature De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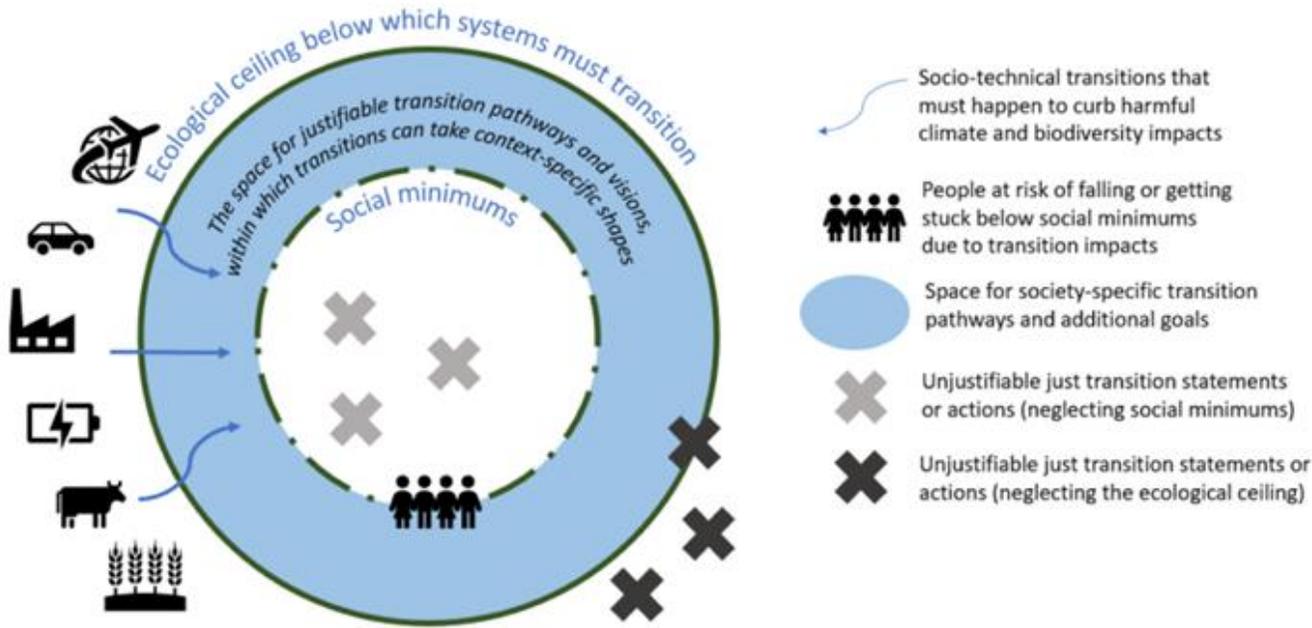


자료: Ekberg et al.(2022); Marschner et al.(2024); Harry et al.(2024); Brulle et al.(2024); Haas et al.(2025); Tienhaara & Green(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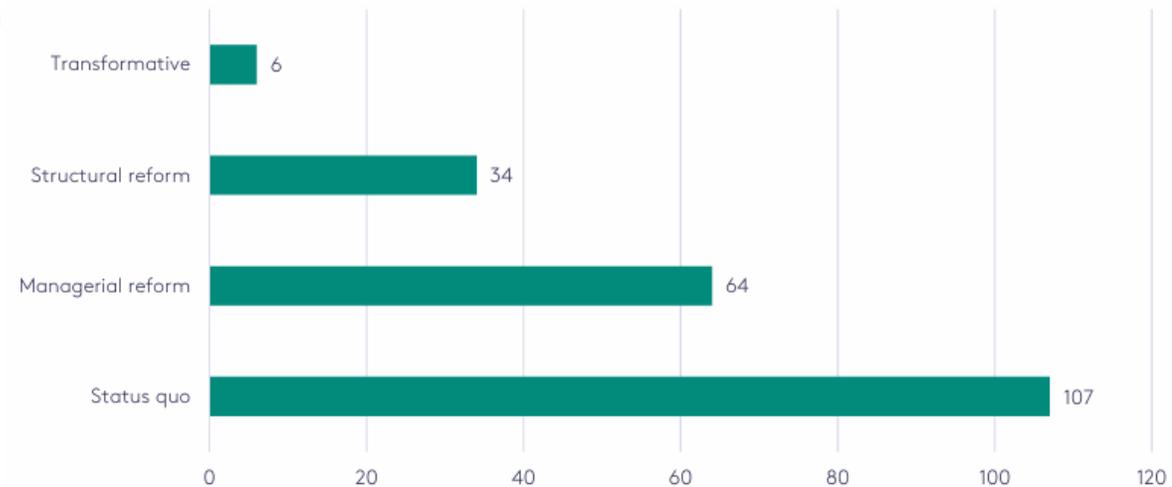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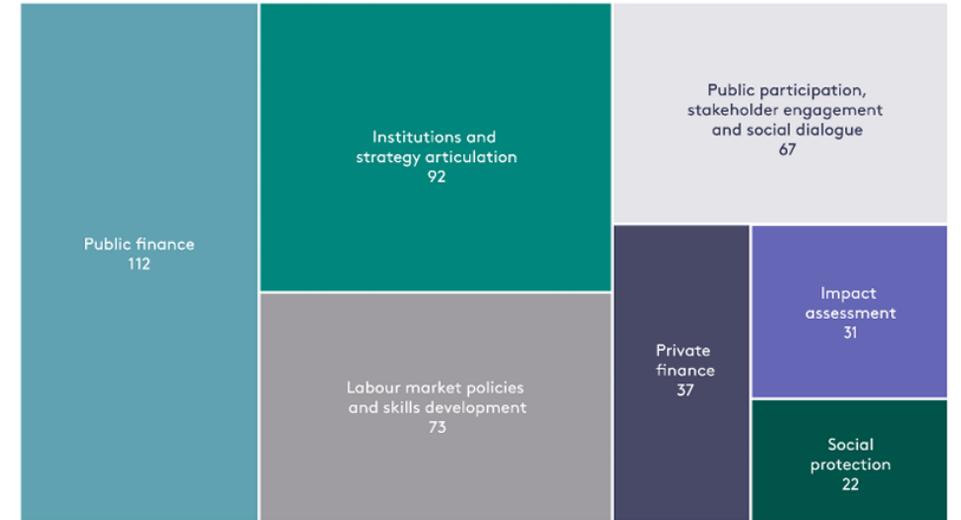
자료: Lamb et al.(2020); Eskridge-Aldama(2025)

정의로운 전환의 의미와 경계, 그리고 현 주소

❖ 61개 국가(유럽연합 포함)의 159개 정책과 법률 분석



자료: Kortetmäki et al.(2025)



자료: Chan et al.(2024)

탈탄소 정의로운 전환의 전략 구상과 현황

- ❖ 탈탄소 정의로운 전환은 전환의 조건을 마련하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일련의 전환 과정이 요구됨
 - 전환 전략은 전환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가운데 현재 상태를 반영한 중점 과제 선정과 이를 위한 실현 방안의 동시적 구성이 다층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전략은 제도적 전략과 사회운동적 전략으로 나눌 수 있음. 주체 형성과 아래로부터의 전환 전략을 추구하는 정치·사회세력화가 전환 동맹의 진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저항(Resist), 탈환(Reclaim), 재구축(Restructure)을 실천할 수 있음(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2; 권승문·이정필, 2017; Burke & Stephens, 2017).

구분	제도적 전략				↔		사회운동적 전략			
	로비·청원·행정개입	입법·제도 개선	국민·주민 투표	법적 소송	선거공약·개입	공론화(제도적·사회적)	대중·지역 운동	전환 실험	대안 시나리오	적록동맹
효과 수준	낮음	높음	낮음	중간	높음	높음	높음(기본)	높음	높음	높음(기본)
활용 정도	중간	높음	낮음	낮음	높음	낮음	중간	낮음	낮음	낮음

자료: 권승문·이정필(2017) 수정

주: 효과 수준과 활용 정도는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음

기후정의 & 정의로운 전환 운동의 성장, 쟁점과 과제

- ❖ 2011년 ‘기후정의연대’, 2019년 ‘기후위기비상행동’, 2022년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등 조직화/대중화/다양화, 직접행동/비폭력 시민불복종 적극 시도
- ❖ 국내외 정세 변화에 조응하면서 기후대응의 제도화/보수화되는 가운데 분화/급진화도 동시 진행 중
 - 담론과 실제 정책 사이의 간극 극복(개념 포획의 위협 대처),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기후 거버넌스 구축, 사회운동의 작동 방식 혁신 과제(김선철, 2022)
 - 기후정책 역행과 잘못된 해결책/그린워싱에 저항, 공공 부문 탈환 및 활용(생태적 공공성), 대중적/급진적 기후정의운동 형성, 탈성장/포스트성장 경제로 전환 탐색(한재각, 2023)
 - 기후정의운동에서 제기하는 ‘체제전환’은 ‘화석연료 문명에서 벗어나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탈성장사회로의 전환’, ‘자본주의 임금노동 관계에서 벗어나 탈자본주의로의 전환’ 포괄(김병권, 2023)
 - 21대 국회가 기후 국회가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22대 국회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부조리. 현상 유지를 전제하는 기후 자유주의(climate liberalism) 토대에서는 딱 그만큼의 기후정치만 가능. 현행 정당체계와 선거제도에서 거대 여당과 위성정당의 묶음은 사실상 기후투표를 방해하거나 왜곡. 현재 주어진 정책 경관(policyscape)에서 여러 대안들은 많은 경우 무의사결정이나 연성화(이정필, 2024).
 -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낙관과 비판, 그 너머의 개입 전략...?

기후시민의회 사례 & 실행과 평가 프레임워크

	Citizens' Assembly 2016-2018, Ireland	Citizens' Convention for the Climate, France	Citizens' Assembly UK	Scotland's Climate Assembly	Denmark's Climate Assembly	German Citizens' Assembly on Climate
Timing	Sep-Nov 2017. Two weekends in person	Oct 2019-Jun 2020. Seven weekends in person plus two interim sessions online. Feb 2021. Additional weekend in person to review official response	Jan-May 2020. Three weekends in person plus two weekends online	Nov 2020-Mar 2021. Seven weekends online. Additional weekend in person to review official response	Oct 2020-Mar 2021. First phase. Two weekends and three evenings, plus ad hoc meetings for editing. All online. Oct-Dec 2021. Second phase. Similar structure	Apr-Jun 2021. Eight weekday evenings and four full Saturdays online
Commissioner	Government with parliamentary resolution	President, although formally established by letter from Prime Minister	Six parliamentary select committees	Scottish Government following amendment to climate legislation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Utilities	Bürgerbegehren Klimaschutz, Scientists for Future
Remit	How the state can make Ireland a leader in tackling climate change?	How can France cut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by at least 40% by 2030 compared to 1990, in a spirit of social justice?	How can the United Kingdom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net zero by 2050?	How should Scotland change to tackle the climate emergency in an effective and fair way?	To contribute and provide recommendations to the political process of climate transition, in particular to the Climate Action Plan	To make recommendations for Germany to comply with Paris Climate Protection Agreement while considering social, economic and ecological compatibility
Participants	99	150	108	105	99	160
Internal practices	Whole assembly considered all issues Small group facilitation Developed own proposals Plenary votes on proposals	Randomly divided into five thematic groups decided by organisers Self-directed groups Developed own proposals Plenary votes on proposals	Randomly divided into three thematic groups decided by organisers Small group facilitation Primarily considered expert generated options Thematic groups voted on proposals. Plenary on common proposals	Randomly divided into five thematic groups decided by organisers Small group facilitation Developed own proposals Plenary votes on proposals	Randomly divided into five thematic groups informed by citizens' deliberations Self-directed groups Developed own proposals Plenary votes on proposals	Randomly divided into five thematic groups decided by organisers Small group facilitation Developed own proposals Plenary votes on proposals
Output	13 recommendations	149 draft laws, regulations and referendums	51 recommendations (with over 80% support)	81 recommendations	117 recommendations in first phase 73 in second phase	84 recommendations
Official response	Considered by Joint Oireachtas Committee on Climate Action (JOCCA) which influenced government's Climate Action Plan 2019 and subsequent Climate Action Bill 2020	Macron originally promised "no filter" for proposals. Climate and Resilience Law translates some aspects of the proposals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Select Committee inquiry and report on the findings	Official government response published in December 2021	Government committed to treat recommendations in the same way as "climate partnerships" established with major sectors of society and economy	Public responses from most political parties during federal election campaign
Budget	€1.5 million for whole assembly which lasted over a year	€5.5 million	€620 K (most coming from foundations)	£1.4 million	€74 K (delivery organization, Danish Board of Technology cross-subsidized)	€1.9 million

❖ 기후시민의회의 주요 특징과 분석틀

구분	주요 내용
정치적 맥락	의회 조직화를 이끈 사회적, 정치적 요인은 무엇인가?
주최/주관	어떤 기관이 의회를 운영하는가?
규모/스케일	의회 참여자는 몇 명이고, 운영 기간은 얼마인가?
선정 방식	의회 참여자의 구성은 얼마나 다양한가?
의회 역할	의회의 임무는 무엇인가?
거버넌스	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얼마나 독립적, 협력적으로 진행되는가?
운영 프로그램	의회의 세부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되고 운영되는가?
토론 촉진	퍼실리테이터와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소통과 대중 참여	의회 참여자 이외 폭넓은 대중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고와 권고	의회의 결정사항은 어떻게 제출되는가?
제도적 반응	주최/주관 기관은 의회 결정/합의사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점검 및 평가	의회 구성/운영의 경과와 결과에 조사 및 평가는 어떠한가?

자료: Smith(2024); KNOCA; GloCAN

2025년 조기 대선과 향후 과제

❖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4.1. 기후위기 책임문는 누진세 강화와 과감한 재정투자로 주택·교통·식량 · 에너지의 생태공공성 강화	108
4.2.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	111
4.3. 기후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헌법 개정	114
4.4.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폭 강화와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의 '기후정의법' 으로 전면 개정	117
4.5. 신공항 건설, 국립공원 케이블카 등 보호지역 내 개발 등 난개발 중단	120
4.6.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SMR 건설 중단 및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	227
4.7. 탈플라스틱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125
4.8. 4대강 자연성 회복과 신규 댐 건설 계획 폐지, 지속가능한 물관리계획	128
4.9. 해양오염 방지, 2030년까지 해양 보호지역 30% 확대 및 갯벌 복원	130

자료: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대개혁과제(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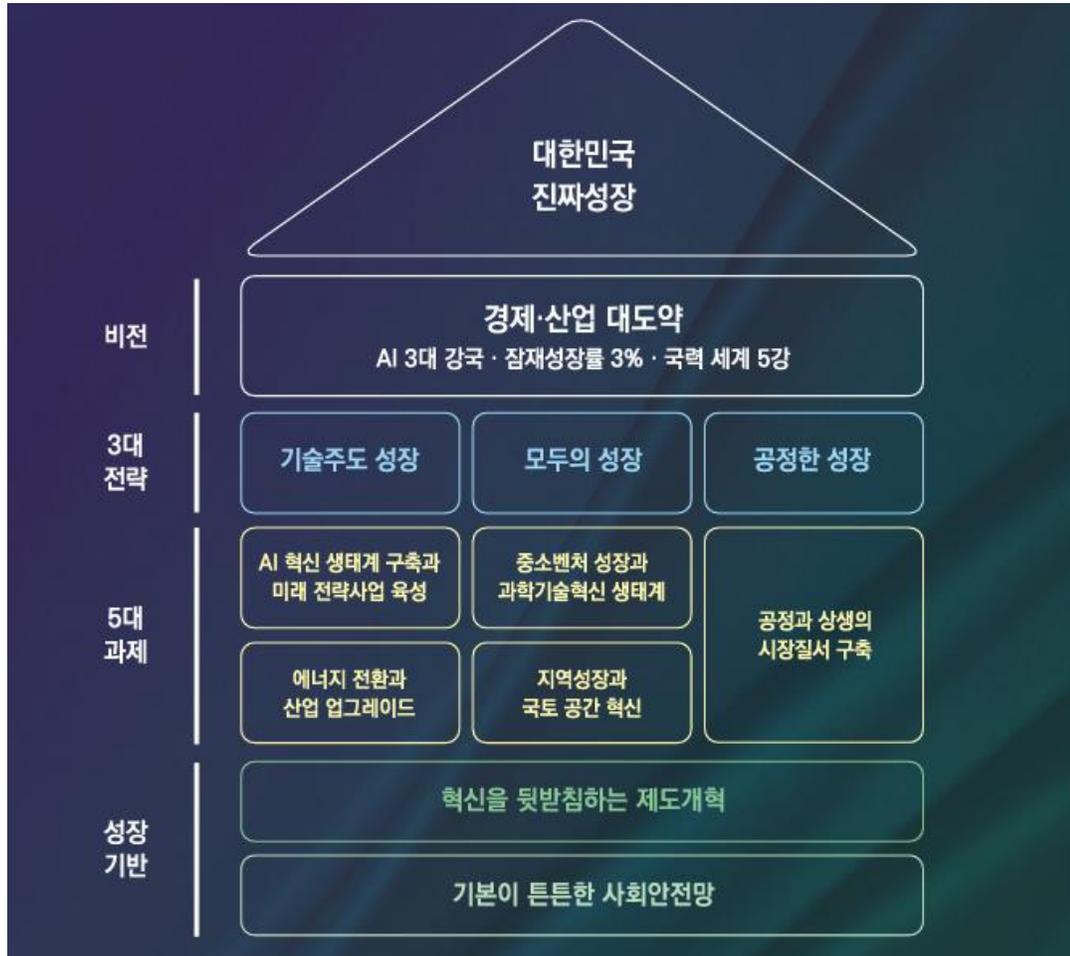
❖ 기후정의 확립으로 생태평등사회로의 전환

- **목표**
 - ✓ 지구 한계 내에서의 성장과 소비 조정으로 탈탄소사회 전환
 - ✓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정의를 확립하여 생태평등사회로 전환
- **이행방법**
 - ✓ 조속한 탈석탄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
 - ✓ 기후정의세수 기반 대규모 공적 투자로 기후위기 속,모두의 존엄한 삶 보호
 - ✓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35년 NDC70%로 상향
 - ✓ 핵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탈핵기본법」제정으로 2040년 탈핵 달성
 - ✓ 환경파괴 유발하는 불필요한 토건사업과 난개발 전면 중지,생태보호지역의 확대
 - ✓ AI및 디지털전환,반도체산업의 사회생태적 규제 강화
 - ✓ 자동차,철강 등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화와 정의로운 전환 지원
 - ✓ 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제도 개선
 - ✓ 기후위기 속,안전하고 정의로운 삶을 위한 제도 마련
- **재원조달방안**
 - ✓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한 기후정의세 도입과 국책은행인 녹색공공투자은행을 통한 재원 조달

자료: 21대 대선 민주노동당/권영국 정책공약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 (개요)

❖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 성장, 행복으로 국민통합



진짜성장론

5대 전략

2.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 ①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216
- ②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214
- ③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실현 218
- ④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220
- ⑤ 노후 생산기반을 리모델링하여 젊고 미래지향적인 국토공간으로 전환 152
- ⑥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햇빛연금 지급하고 에너지 자립 실현 223
- ⑦ 친환경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탄소농업 전환 224
- ⑧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산업이자 거점으로 육성 225
- ⑨ 국가가 책임지고 청정한 우리 바다 수호 227
- ⑩ 탈(脫) 플라스틱 정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저장고 프로젝트' 추진 228
- ⑪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229
- ⑫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강력 추진 230
- ⑬ 국제적 수준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추진 232

감사합니다

새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 정책’

2025-07-02

배보람 지역전환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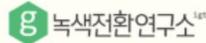
beechtrees38@igt.or.kr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정부가 필요

2035년 NDC 설정과 2026년 2월 2031~2049 감축경로 설정 :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감축 목표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이



단위: 백만 톤 CO2eq | 기간: 1990~2050년 (2022년 이후 목표치)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4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한국 2022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7억 2,430만 톤
1990년 대비 133.2%증가
2018년 대비 7.6% 감소 (IPCC 2006년 기준)

2030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순제로 0에 달성되어야
2030년까지 불과, 5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
현재의 결정에 따라 미래의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의 현재 감축목표 설정을 수정 필요하여 '31년부터 '50년까지 감축 경로 규정해야 함



기후정책 제안1.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청소년 기후소송 위헌 이후,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재건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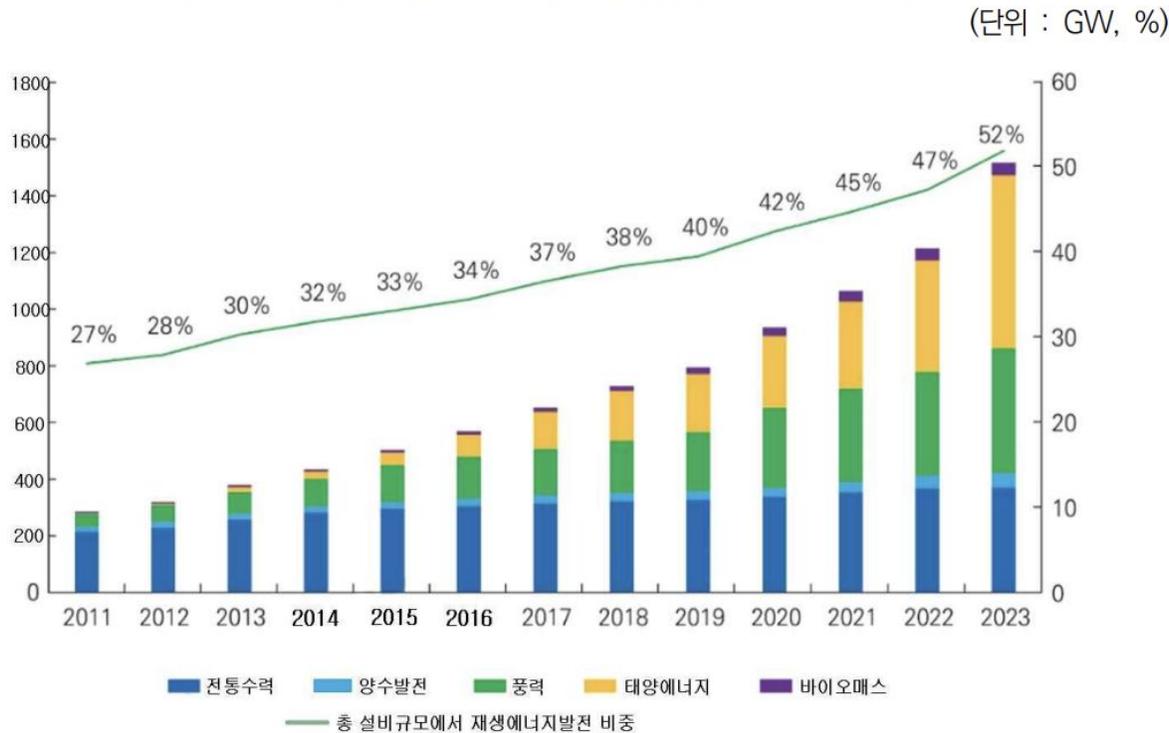
정책	주요 내용
탄소중립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기후생태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과 생태적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생태국가 원리를 헌법원리로 채택 기후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자연과 조화하는 '탈탄소 생태경제질서' 전환 명시
1.5°C 경로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감축목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감축목표 설정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한 탄소예산 접근 방식 채택 민간 석탄발전 통계 누락 및 CCUS·국제감축 등 낮은 실현가능 수단에 기반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시민참여 제도화를 통한 기후민주주의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위원회의 이해당사자 중심 개편 기후 시민의회 신설
기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경제부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하여 기후·에너지 산업 총괄하는 기후경제부로 개편 지자체의 기후에너지국 신설과 인력 확충,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 확대로 촘촘한 이행 체계 구축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중국의 재생에너지와 산업전환

중국 발전부문 총 설비의 50% 이상 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중국의 제2전원, 풍력은 제3전원으로 부상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저장정책을 주요 성장산업으로 제시하고, 전력화와 디지털 기반 산업 성장 전략제시

〈 재생에너지발전 설비규모 및 비중 변화(2011~2023년)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2024), 중국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보고서

朝鮮日報

드러난 '中 제조 2025' 후속편...
 한국의 주력 품목 반도체·車 정조준

[中 '제조 2025' 10년 성적표] [2]
 첨단 기술 키우는 10년 대계 추진 중
 한국 주력 산업과 업종 겹쳐 경고등

조성호 기자
 입력 2025.05.28. 00:57 | 수정 2025.05.28. 15:58



중국 오성홍기와 반도체 이미지. /연합뉴스

중국이 세계 최첨단의 제조업 강대국이 되겠다는 10년 계획인 '중국 제조 2025'의 목표를 대부분 달

'중국 표준 2035' 계획에 명시된 주요 산업

8대 신산업	9대 미래 산업
차세대 정보 기술	메타버스
신재생에너지	뇌·기계 인터페이스
신소재	양자 데이터
고부가가치 장비	휴머노이드 로봇
신에너지 차량	생성형 인공지능
녹색 환경 보호	바이오
민간용 항공	미래 디스플레이
선박 및 해양 공학 장비	미래 네트워크
	신형 에너지 저장 (배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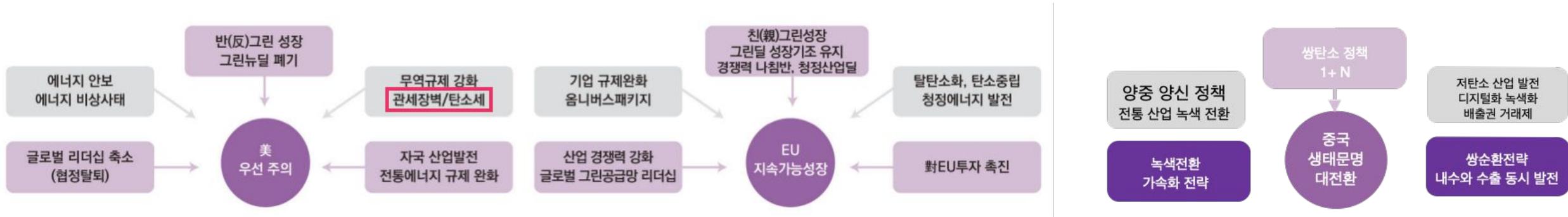
자료=중국 정부 '신산업 표준화 선도 사업 시행 계획(2023-2035)' 문건

그래픽=양진경

'중국 표준 2035' 문건은 2023년 중국 정부의 네 기관(공업정보화부·과학기술부·국가에너지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이 합동으로 작성했다. 그동안 외부에 문건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중국 지도부가 이런 '정부 주도 산업 육성책'이 부각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과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탄소중립정책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전력과 열분야 등의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고,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채택



* 출처: 한국무역협회 <2025 그린성장 전략변화와 시사점>에 중국 추가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Brief>

- **탄소관세의 사례, 프랑스 녹색산업법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정**
 - 생산단계에서 산출된 탄소발자국 점수 최소 70% + 재활용 및 바이오 기반 재료 사용, 배터리의 수리 가능성을 고려한 재활용성 최대 30%
 - 80점 만점에 60점 이하이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새로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환경 점수와 최소 점수값을 계산하는 방법론(행정명령)
- **탄소 발자국 계산:**
 - **EC = 철강 + 알루미늄 + 배터리 + 철과 알루미늄, 배터리를 제외하고 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탄소발자국 + 가공과 조립에 사용한 에너지 + 조립 장소에서부터 프랑스 유통사까지 운송에서 배출한 양**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기준 주요국 항목별 탄소배출 계수

	철강	알루미늄	기타 원자재	배터리	가공 조립 에너지
유럽		8.6	4.6	53	
북미		8.5			
독일	1.4				0.83
프랑스	1.4				0.58
미국	1.1			55	1.05
한국	1.7			63	1.43
일본	1.9	12.6		67	1.46
중국	2.0	20.0		68	1.60

출처:산업연구원 (2023.10)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참고

단위: CO2eq/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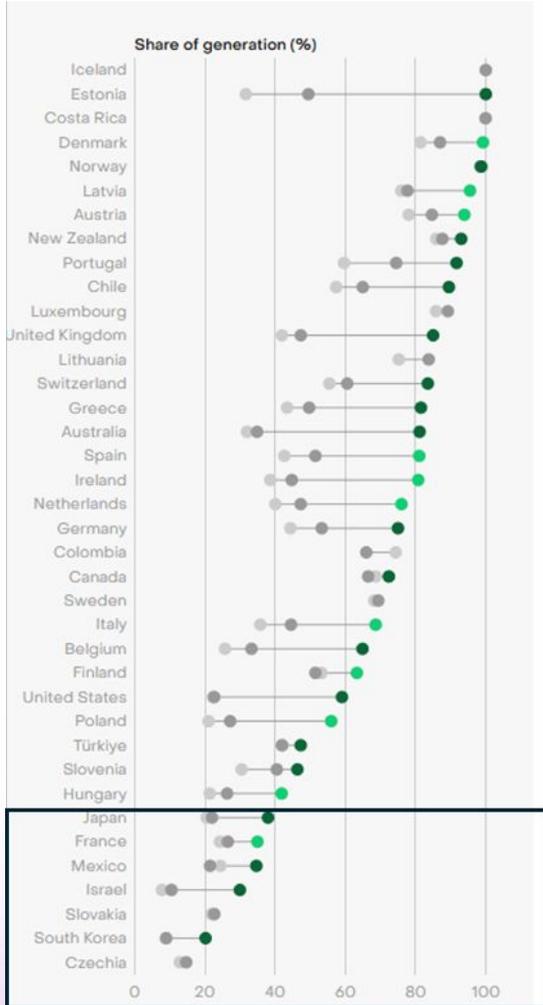
기후정책 제안2.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정부주도의 대규모 녹색산업 전환 정책 - 녹색산업 공급방법, 순환경제, 공공부문 2035 탄소중립, 기후재정 GDP 2% 확보

정책	주요 내용
기후와 경제를 모두 살리는 '그린AI'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센터 신설 시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 의무화, 재생에너지 조달 가능지역에 우선 신설하도록 규정 •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을 통한 사회적이고 생태적으로 위험이 없는 인공지능 명시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주도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주도권 확보 • 민관협력을 통해 '클린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
전기차캐즘 극복과 이차전지 최강국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대중교통 100%, 2035년 승용차 신차 판매 100% 전기차 보급 목표 설정으로 내수 시장 견인 • 「K-배터리 특별법」 제정으로 2030년까지 국내 투자 100조,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산업단지를 탄소중립 실현의 거점으로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스마트 그린 산단 100개 조성 •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및 성과 연동형 보조금 및 세제 지원 확대
녹색산업 공급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패스트 팔로워 전략 수립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녹색산업 공급방법」 제정 • 기후투자공사 설립, 기후투자 유입할 녹색 보증 규모 대폭 확대
순환경제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한국판 에코디자인 규정 제정 • 국가 재사용 목표 수립과 다양한 재사용·재제조 산업 육성
공공부문 2035 탄소중립으로 녹색산업 성장 마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의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 2030년 공공부문의 전력 RE100 달성, 전기차 전환 100%, 그린 리모델링 100% 달성
2030년까지 기후재정 GDP 2%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대응기금을 제외한 기후 예산을 현행 10조 원에서 2030년까지 3배로 대폭 확대 •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탄소세로 개편하고 도로 및 공항 건설 예산을 축소하여 추가 자원 6조 원 확보 • 배출권거래제 발전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100%까지 상향시켜 13조 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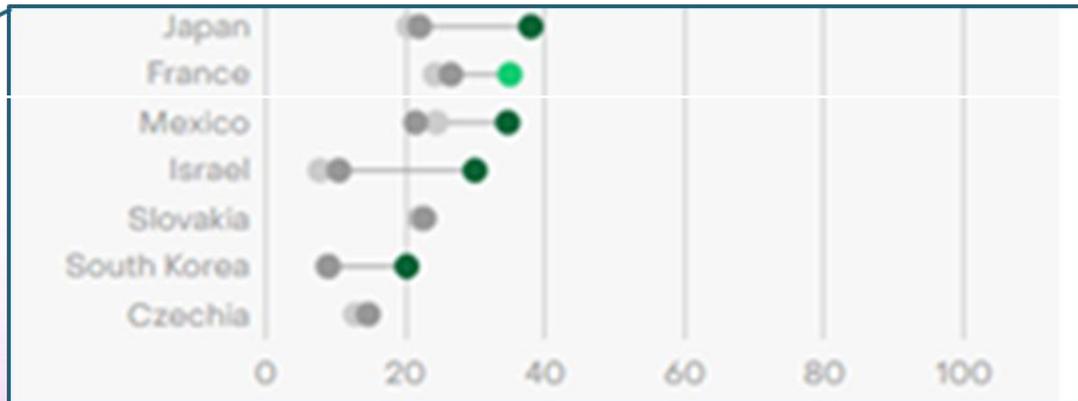
OECD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권으로 목표상향 필요

재생에너지 확대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2030년 30%비중을 확대



OECD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권으로 목표상향 필요

-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2030년 목표치(21.6%) 역시 OECD 최하위 수준에 해당 (OECD 풍력과 태양광 발전비중은 17%)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일본(38%), 미국(59%), 독일(75%), 영국(85%) 으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거나 뒤쳐지는 수준
-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로 상향시키고 침체된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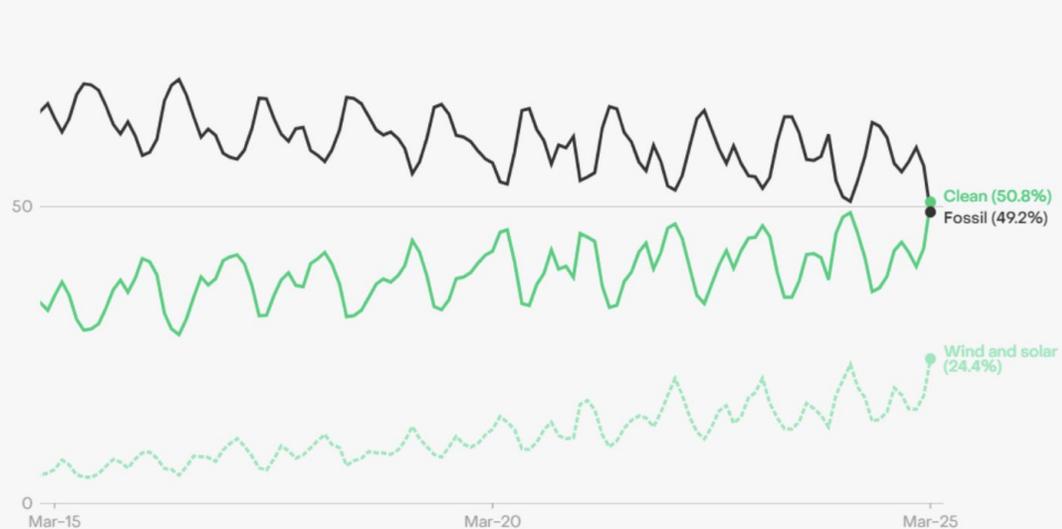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지만, 미국 청정에너지 2025년 3월 비중 50% 돌파

유럽은 2030 전력의 재생에너지 비중 45%, 냉난방의 34% 재생에너지 충당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전력분야 재생에너지 확대하며 2030년까지 가스 소비 감축까지 추진하며 열분야 탄소중립 정책 가속화

Fossil fuels accounted for less than 50% of the US electricity mix for the first time ever in March 2025

Share of electricity generation (%)



Source: Monthly electricity data, Ember; ember-energy.org/data/electricity-data-explorer

EMBER



More than double

the amount of solar energy produced since 2019

REPowerEU

Affordable,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for Europe



More electricity from renewables than gas

p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2022

'리파워EU' 정책 주요내용

〈자료: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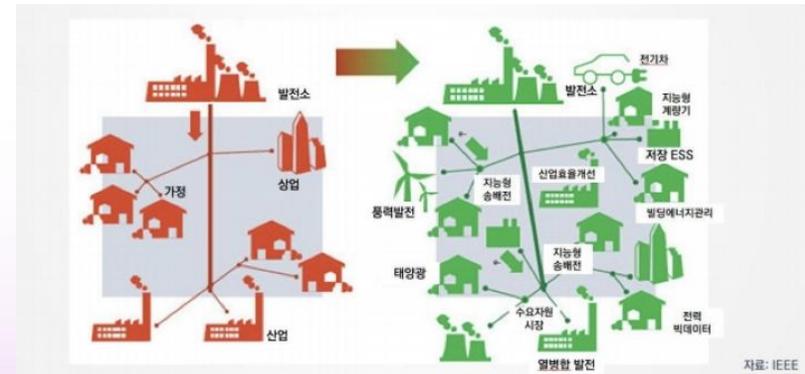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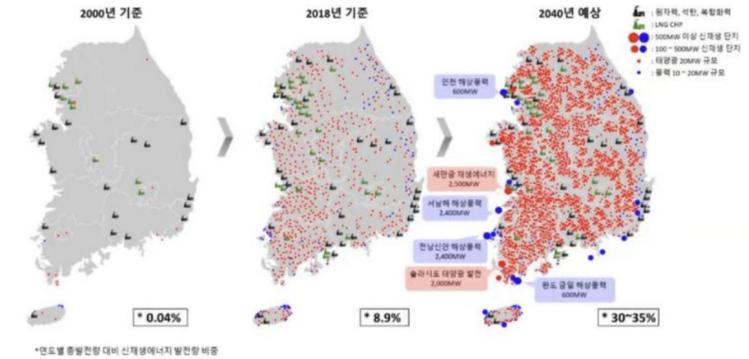
- ※ 새 건물에 태양광 패널 의무화(2029년까지)
- ※ 재생에너지 비중 45%로 확대(2030년까지)
- ※ 에너지 소비 감축 13%로 확대(2030년까지)
- ※ 가스 소비량 30% 감축(2030년까지)
- ※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가스 공급원 다변화
- ※ 수소 및 바이오메탄 가스 생산 확대

기후정책 제안 3.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해상풍력 투자와 지자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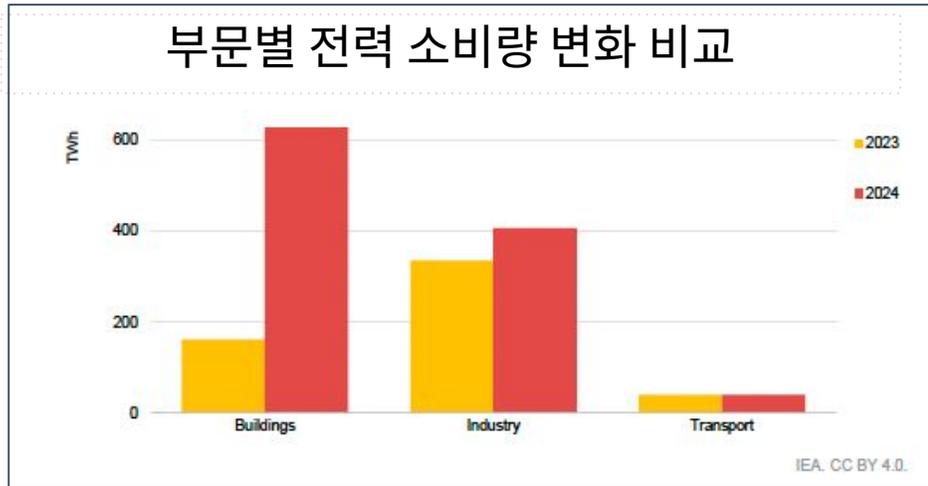
정책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중진국 도약 태양광·풍력 2030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중 목표를 30%로 재상향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로 전력 수요를 분산해 전력망 건설 최소화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 구축
203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2035 탈석탄 로드맵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부터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신규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전면 중단 2030년까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탄소배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우선순위 하향 조정 2035년 탈석탄 선언 및 재생에너지 대체 로드맵 수립,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마련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수급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의 우선 설정 및 타 계획과 연계한 보급 성과 평가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계획으로 전면 개편
공공펀드 40조 해상풍력 투자와 이익공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40조 원 규모 민간 투자 유치 이익공유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보장하고 수용성 제고에 기여
지자체별 태양광 의무할당제 산업 경쟁력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태양광 설치 의무 용량 부여하고 공공주도의 입찰 확대 옥상, 산단 지붕, 주차장, 폐도로 등 유휴부지 태양광을 적극 확대하고 지자체 인허가 규제 합리화 국내 생산 태양광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하고, 탄소검증제 배출량 기준 강화 등 인센티브 확대

[참고] 우리나라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



늘어나는 도시의 전력소비 증가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책 필요

‘24년 전세계 빌딩의 전력소비량 600TWh(5%) 증가, 가장 더운해로 기록된 2024년



출처: IEA(2025) Global Energy Review 2024

역대 전력 수요 순위

단위: GW,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경향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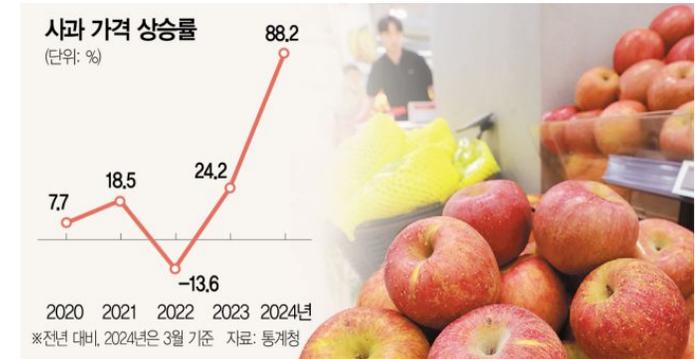
출처: YTN

- IEA(2025) 지난해의 건물부문 전력소비량 급증의 배경에는 미국, 중국, 인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이 원인이라고 지적
- 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평년보다 더 오래 지속되며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경향 확인, 한국 2024년 여름철 시간대 전력소비 전년대비 6% 정도 증가

기후정책 제안 4. 기후위기와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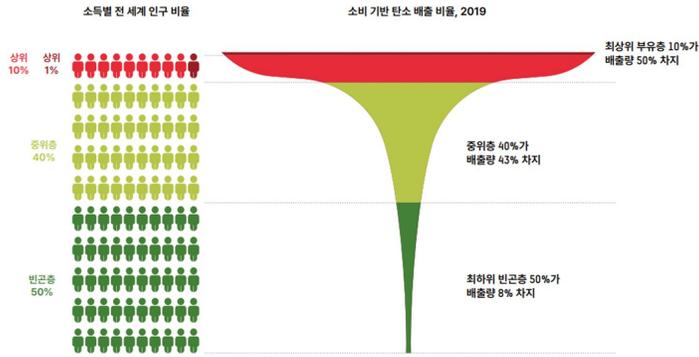
탄소중립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난방 탈탄소화와 녹색교통 정산제등

정책	주요 내용
기후 인플레이션 대비 장바구니 물가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취약 품목 지정을 통한 가격 안정 및 주요 곡물의 공공 비축 물량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구매 지원 확대 및 공공 급식·공공 마켓을 통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전력수요와 생활권을 고려한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 지역별 전력 자립률 제고 등 분산형 시스템 등을 고려한 도시 및 지역 간 통합 모델 추진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영향 고려하고, 신도시 중심 N분 도시 추진
건물 난방 탈탄소 지원 패키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리모델링 연 2% 달성, 난방 탈탄소 및 지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정책 패키지 도입 및 민간 건축물 탈탄소 지원 체계 구축 2025년부터 신축 건물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2035년부터 재생에너지 난방 의무화 입법 추진
녹색교통이용 정산제 탄소중립 교통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녹색교통이용 정산제도 도입 일터 중심의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탄소중립과 노동환경을 연계 전기차 구매 촉진 정책 패키지 마련으로 전기차 보급 가속화
일회용품 퇴출과 플라스틱 가치사슬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퇴출을 위한 로드맵 수립순환경제 실현 위한 플라스틱 가치사슬 책임 분담 체계 수립 체계적 모니터링, 산업계 지원, 시민 참여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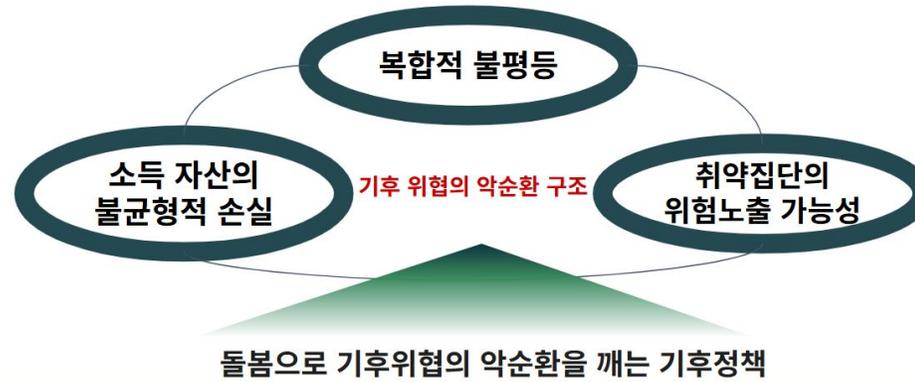


주거 정책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동시에 추구해야

불평등의 문제, 삶의 질의 개선이 없는 기후위기 대응이 봉착할 한계



자료: OXFAM 2019



출처 :UN/DESA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igt

- **기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책임, 영향, 대응능력 등에 따라 기후불평등을 발생시키고 가난한 지역, 사람들은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음. 기후불평등의 근본적 구조는 결과적으로 기후위기가 기존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
- **정부 적응정책을 통한 일부 대책 마련,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발생의 변동성, 복합성을 인지. 그러나...** 이를 담아낼 정책적 제도는 부재 '제3차 국가위기 적응 강화대책'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관리하는데 폭염, 한파, 피해의 형태,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하며, 취약성을 고정적 개념이 아닌 위협요인에 따라 한시적이거나 혹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등 변동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음. 그 대응 정책 방향 역시 단편적인 조치가 아닌 주택, 에너지, 질환 대책, 중점관리지역의 식별과 대책마련등 다변화 경향이 확인 ([관계부처합동, 2023](#))



출처 : MBC, KBS, YTN

기후위기 시대, 적응과 감축을 동시에 다루는 정책의 필요성

탄소 감축을 더 고려하는 에너지 복지사업, 혹은 기후위기 적응 없는 탄소감축 사업의 통합적 접근 필요

최저주거기준 개정안			
표준가구 구성	실(방) 구성	현행 총주거면적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안
1명 1인가구	1K*	12㎡ (3.6평)	14㎡ (4.2평)
2명 부부	1DK*	20㎡ (6.1평)	26㎡ (7.9평)
3명 부부 + 자녀1	2DK	29㎡ (8.8평)	36~38㎡ (10.9~11.5평)
4명 부부 + 자녀2	3DK	37㎡ (11.2평)	43~44㎡ (13~13.3평)
5명 부부 + 자녀3	3DK	41㎡ (12.4평)	46~47㎡ (13.9~14.2평)
6명 노부모 + 부부 + 자녀2	4DK	49㎡ (14.8평)	55~56㎡ (16.6~16.9평)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 숫자는 침실(거실 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자료/ 국토해양부



출처: 연합뉴스, 서울신문, 연합뉴스

- **경제적 격차에 따른 에너지소비 비중 증대 현상:** 소득 1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 항목 중, 주거·수도·광열은 두번째로 높은 비중(18.1%)을 차지하는 항목. 소득 5분위 가구의 동일 항목 비중(8.3%)에 비해 2배 이상 높음([통계청, 2024](#)) 이 부담의 원인은 단순 소득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구원 숫자, 주택 유형, 주거면적 등의 변수가 에너지 소비 및 빈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오수미 외, 2021](#))
- **재난에 준하는 기후상황 발생 증가는 낮은 인프라접근성을 갖는 취약계층에 위험성 증폭:** 폭염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어컨 보급 비율 역시 서울시 일반가구 보급률 89% 대비, 저소득층 보급률은 18% ([서울연구원, 2020](#))

장성구 기자 20110105
@yonhap_graphics(트위터)

기후정책 제안 5. 기후위기와 돌봄, 지역, 복지

노동, 주거, 돌봄을 위한 기후적응 인프라 공급을 보편복지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시대의 시민안전 강화

기후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복지 정책

위험하면 걱정없이 잠시 멈출 수 있는 노동

- 기후소득보험과 기후유급휴가제도 신설
- 극한 기후에 대응하는 산업안전의무조치 명시
- 기후유급휴가제도와 극한기후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에너지가격 걱정을 더는 따뜻하고 시원한 집

- 주택에너지복지법 제정
- 따뜻하고 시원한 주거환경을 보편복지로
- 취약주거에서 일반주택까지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거주 환경 조성

기후통합돌봄으로 사회서비스 확대

- 기후통합돌봄으로 지역돌봄정책과 기후정책을 포괄
- 기후돌봄의 국가 책임을 명시
- 주거, 건강, 생활환경의 통합적 관리

기후적응한계를 지키는 도시의 적응인프라

- 기후적응법 제정
- 기후적응한계선을 절정하여 도시공간, 인프라, 시설 의무규정을 제시
- 기후변화적응지표를 통한 지역 적응역량 강화

기후서비스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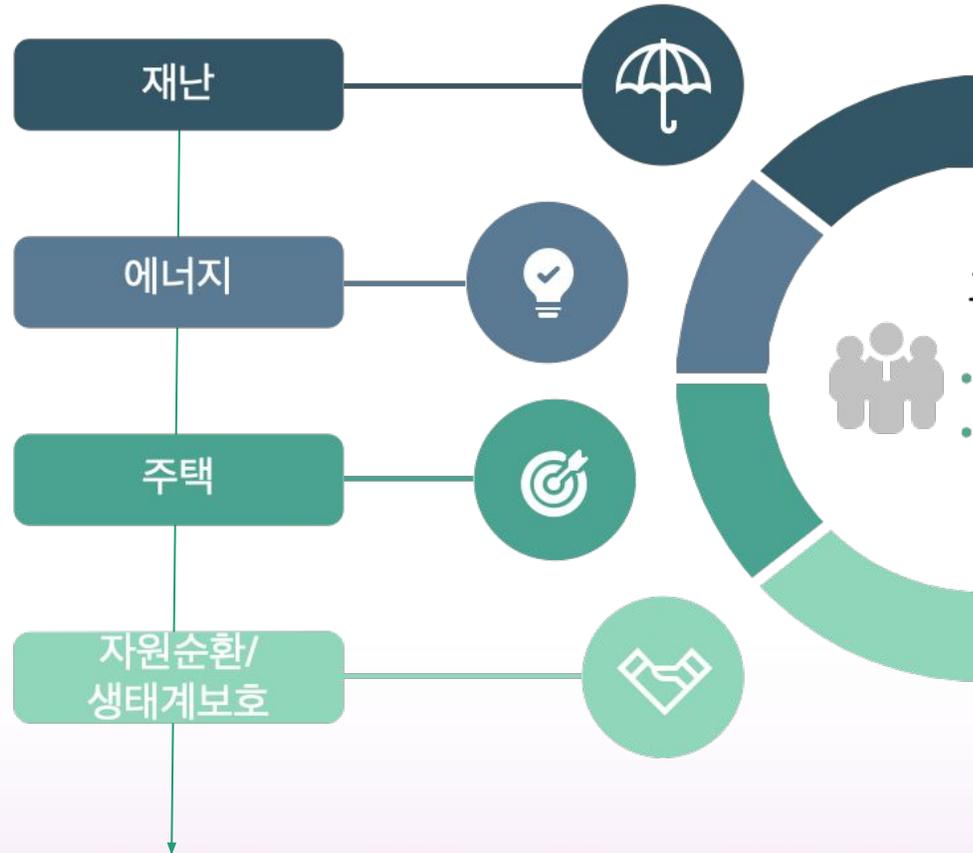
탄소중립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난방 탈탄소화와 녹색교통 정산제등

- 폭염 한파 대응 물품 지원 및 쉼터 운영
- 기후행동봉사단, 재난안전보안관
- 기후 재난 이동 지원 및 피해자 상담 지원 등

- 태양광 설치 및 관리 운영 : 태양광 직접 설치 및 관리
- 주택 에너지 진단 : 주택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성능 개선 컨설팅

- 주택복지 실태조사 및 상담 : 반지하주택조사, 주거취약계층의 실내환경진단 및 지원
- 주택관리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 : 현행 공동주택 유지 관리에서 그린 리모델링 업무로 확대(건축물에너지평가사 450명)

- 지역 거점으로서의 리페어샵 및 제로웨이스트샵
- 농업청년인턴 및 생태공간관리인력
- 수요응답형 공공교통지원
- 방문건강관리사



고용유발효과

- 청정에너지 : 7.4~22.7명/10억원
- 그린 리모델링 : 16.2명/10억원

* 출처 : GREENPEACE

기후정책 주류화를 위한 기후거버넌스

시민들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기후 거버넌스

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한다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민주주의	경제산업	에너지전환	생활	물	지역
탄소중립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기후생태헌법 개헌	글로벌 주도권 회복을 위한 RE100 반도세 특별법	녹색산업 성장 마중물 위한 공공부문 2035 탄소중립	공공편의 중심 40조 규모 해상풍력 투자 이익공유 확대	녹색교통이용 장산제도 도입으로 탄소중립 교통 혁신	통합적 기후적용체계 구축 위한 기후적용법 제정
1.5°C 정부의 헌법제안소 결정에 부합하는 감축목표 수립	탄소중립 약거리 이차전지 캐즘 극복 이차전지 최강국 실현	2030년까지 기후재정 GDP 2% 확보	산업 경쟁력 회복 지자체 태양광 의무할당제 신설	일회용품 비축과 플라스틱 가시서술 책임 강화	탄소중립이 지역경제 발전 되는 생태지원보조금 신설
시민참여 제도화 통한 기후민주주의 구현	산업단지 탄소중립 실현 거점 구현	재생에너지 중립국 도약 태양광 총력 2030년 30%	기후 인플레이션 대비 장비구니 물가 안정	기후소득보화와 기후휴가제 도입으로 기후탄력적 사회안전망	석탄발전소 노동자 소득보장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
기후 중심 경제 전환 위한 기후경제부 개편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위한 녹색산업 공급망법	203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2035 탈석탄 로드맵 수립	전력수요와 생활권 고려한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우리동네 기후통합돌봄 온마을 돌봄	기후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기후서비스일자리 5만 개 창출
기후와 경제 모두 살리는 '그린AI' 구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순환경제 집중 육성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탄소중립 위한 건물 난방 탈탄소 자원 패키지	누구나 따뜻하고 시원한 집에서 사는 보편적 주택에너지 복지법	비용도 줄이고 주민 행복 높이는 태양광 살림살이 패키지

- 01 ● 기후정책 주류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축과 적응을 모든 정책과 모든 부처의 정책과 통합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기후정책의 일원이 되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대통령 리더십, 대통령비서실 기후수석 신설, 기후부총리) - 민관합동 심의의결 기구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내실화(목표 미달성에 대한 조치, 자문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계획과 보고에 대한 설명과 공개의 의무)
- 02 ● 통합과 조정이 가능한 부처체계 (주무부처) – 기후경제부, 기후에너지부
- 03 ● 기후재정 –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예산, 기후대응기금 등
- 04 ● 시민참여와 학습을 위한 장 –기후시민의회/기후시민회의
- 05 ● 지자체 탄소중립 거버넌스
- 06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 국가온실가스감축 종합정보센터(정확성과 투명성)

출처: 2025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 제안서

현 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과제 : 앞으로 5년 간 열린 ‘정치적 시간’

2050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 달성여부가 현 정부의 임기 종료와 함께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총선이 위치

	2025 대선	2026 지방선거	2027	2028 총선	2029	2030 대선지선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실행	2035 NDC 확정 COP30 브라질	UNFCCC 2차 투명성보고서		UNFCCC 3차 투명성보고서		4차 투 명성보고서 NDC, 메테인 서약목표 E효율2배 재생e 3배 에너지저장과 전력망 서약 국토 30%보호구역
국제통상 탄소중립 규제	IMO 선박 규제 ISSB 공시적용 KSSB 공시 마련 배출권거래제 지역별전기요금 차등제	CBAM 시행	IMO 해양 오염 방지 협약 개정안 EU ETS II (건물 수송 적용) EU 디지털제품여권	IMO 연간 온실가스 연료집약도 목표 적용		
2030 NDC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개정 (2031~2049)		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28~47)		신재생e 21.6% 그린리모델링 160만건 무공해차 450만대
석탄발전 폐쇄일정 (20기)	태안1	태안2. 하동 1. 보령5 (3) 12차 전기본 (2026~2040)	삼천포 3.4, 보령 6 하동 2.3 (5)	삼천포 5, 태안 3, 하동 4 (3) 13차 전기본	동해 1.2, 삼천포 6 태안 4 당진 1.2 (6)	당진 3.4(2) 14차 전기본

감사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 경제와 삶의 전환을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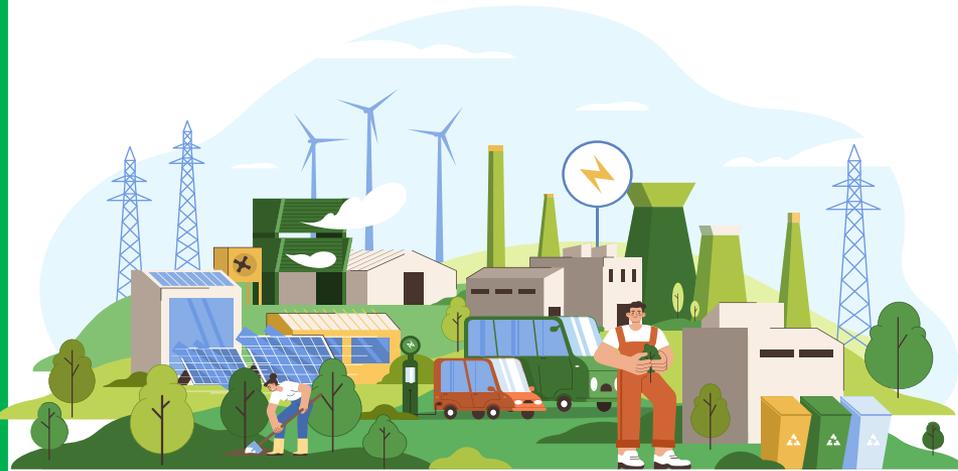
홈페이지

igt.or.kr

연구소 후원

<https://online.mrm.or.kr/7xdqDo5>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과제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안명균

시민발전 입법추진단 단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원 태양과 바람은 공공재
(재생에너지생산은 모든 시민의 권리. 의무)

재생에너지생산 시민참여, 복지, 일자리확충 등 공공성 실현
시민참여 이익공유의 최선의 수단은 협동조합-구양리 사례

-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법, 제도 부족-
(이격거리규제, 계통연계 차단 등 규제는 지속됨)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 공공성 확보와 시민주도 필요 -

재생에너지생산 목표 법제화 계통연계 의무화 등 법 제도 필요

(한국 재생에너지 - 분산형 소규모 태양광)

- 2025년 31GW 태양광 설비 중 72% 1MW 미만-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 법.제도 필요

- 시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 -

재생에너지 확대 5만 시민 서명운동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 되돌리기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하세요

우리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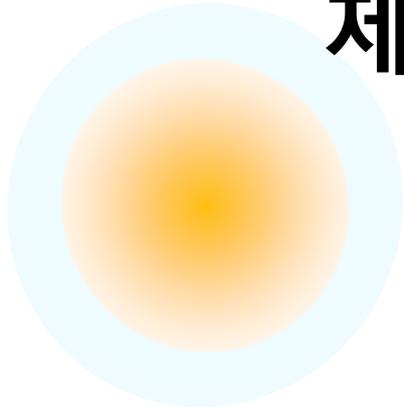
- 1 탈석탄법 제정과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법제화
- 2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및
우선구매 의무화
- 3 누구나 재생에너지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민 기본권 보장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비상행동

2050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과제



- I.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보급목표 및 이행경로 법제화
- II.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촉진을 위한 계통연계·우선구매 의무화
- III.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력시스템 개편
- IV.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 V.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I.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보급목표 및 이행경로 법제화

- OECD 최하위 재생에너지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 필요
- 보급목표의 법제화가 아닌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는 한계로 정권과 시기에 따라 보급목표와 이행경로 변동으로 혼선 발생
- 탄소중립실현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음

보급목표와 이행경로의 원칙과 전제

- 2030년 탈석탄, 2035년 내연차 생산·판매 중지, 2040년 탈가스, 신규원전과 수명연장 금지를 기준으로 단기 5년, 중장기 10년 단위 법제화.

I.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보급목표 및 이행경로 법제화

법제화 방안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

- 제3조(기본원칙) 개정, 8조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신설.
- 1) 2030 35%, 2040 80%, 2050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명시.
- 2) 2030 130G, 2040 500G, 2050 700G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명시
- 10조 기본계획에 목표 포함 개정, 11조 시도계획에 목표 포함 개정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 제3조,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 2030 35%, 2035 60%, 2040 80%, 2045 95%, 2050 탄소중립
이행경로 명시.

Ⅱ.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촉진을 위한 계통연계·우선구매 의무화

•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기초의 일관성·확실성 유지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은 국가의 의무임

- 정부와 (한전은) 2016년 '계통접속 보장제도' 도입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보장, 2024년 10월 31일부로 종료하는 등 책임 방지
- 재생에너지 계통연계와 우선구매를 의무화는 규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해야 함.
-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발전(여주 구양리등) 전국확대를 위한 필수 조건

법제화 방안 (제15조(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연계와 의무구매 지원 등) 개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계통연계와 우선구매를 의무화는 규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 '1000kW 이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및 우선구매 의무화'
- '출력제어 시 보상제도' 도입

Ⅲ.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력시스템 개편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가능
- 현재의 석탄·원전·LNG 등 대규모 화력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시스템은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의 독점, 정치적 개입, 감독과 운영의 후진성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 석탄·원전·LNG 등 대규모 화력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계통을 hub & spoke 방식의 분산형 계통으로 전환해야 함

Ⅲ.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력시스템 개편

전력시스템 개편 방안 :

한전 독점의 송변전, 배전을 분리

- 한전의 송변전 부문과 전력거래소를 통합하여 송전망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독립,
- 재생에너지 확대를 반영하여 배전망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지역-권역 분할하여 공적기반하에 독립.
- 전력시장의 운영과 감독의 정상화를 위한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치.

V.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1. 이격거리 규제 해소

-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30개(수도권·광역시 제외 시 95%)가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관련 규제(조례)를 시행 중
-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백서' 태양광 시장잠재량 369GW, 2023년 11월 감사원 이격거리 규제 반영하면 77.1% 감소한 84.5GW임.
-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2017. 3.) 및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2023. 1.) 발표 5개 기초지자체만 정부의 권고안 수준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함.

입법화 정책제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이격거리를 허용하도록 법 개정.

V.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도입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행 절차는 장기간의 준비와 비용이 수반됨
1)부지발굴, 입지 선정 및 사전 검토, 2)발전사업 허가, 3)개발행위 허가, 4)한전 계통연계 등 부지발굴-계통연계까지 매우 복잡, 전문적인 절차
- 시민 누구나(개인, 일반 사업자도 포함)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정책제안

-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재생에너지생산 통합지원센터 등 지원체계 구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IV.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1) 시민참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지원 법률 필요성

-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생산자가 될 수 있는 지원 근거
- 구양리 등 농촌형 태양광복지마을 지원 근거
- 공동주택 등 시민이익 체감형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 근거
- 시민참여 핵심 수단인 에너지협동조합 지원 근거

2) 시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내용 제안

- 농어촌형, 도시형, 단체(노조)형 시민주도재생에너지협동조합 규정
- 공공부지활용 재생에너지생산에 시민주도 협동조합 참여 근거
- 농어촌형 협동조합 조직과 운영을 지원할 지원체계 근거

시민주도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 필요성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은 시민 누구나의 권리, 의무
2. 햇빛바람연금 등 주민 이익과 복지 실현 :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수단은 협동조합(구양리마을협동조합사례 등)
3. 기존 형식적인 시민-주민참여 방식의 전환 필요 :
주민주도-주민이익-공동체복지 (자본중심에서 주민주도로)
4.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의 명확한 규정과 규율 필요
5. 공공자원인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동체 복지와 주민 소득향상으로
(지역소멸-농촌소멸에 대응)
6. 금융지원과 공공부지임대 등 행정지원으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확대 방안

시민주도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 주요 내용

1. 농어촌형, 도시형, 단체(노조)형 시민주도재생에너지협동조합 규정을
통해 주민 이익과 공동체 복지실현 체계 규정
(민주성-주민주도, 공공성을 실천하는 협동조합의 성격 규정)
2. 공공부지임대, 금융지원 등 시민주도재생에너지협동조합의 지원 근거
3. 주민주도재생에너지협동조합의 확산을 위한 조직, 운영 지원체계 근거
4.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확대를 가로 막는 규제 제외 근거
(전라남북도, 광주시, 제주도, 강원도 등 계통연계 문제로 사업 불가능)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2.0 사업 계획

1) 입법추진단 활동

- ① 제도개선 정책과제 중 입법화 과제 법안 마련 활동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이행경로, 계통연계·우선구매, 원스톱서비스, 이격거리, 세제개편 등 협동조합 지원관련 법안 마련.
- ②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

2) 국회의원 챌린지 : 7월까지 100명 목표로 진행

3) 정책간담회

17개 시도별 정책간담회 진행
(시도당 위원장 + 시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4) 재생에너지 설치 부지찾기 시민캠페인

시민비상행동(사회적경제조직, 시민단체 등) 준비 및 확대 과정으로
계획 수립 중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원칙

- 1)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의 꿈을 키우자!
- 2) 시민참여의 핵심 거점이 되자!
- 3)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잊지 말자!
- 4) 모든 곳에서 재생에너지생산과 탄소중립은 가능하다!
- 5) 순간의 이익 보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투자하자!
- 6) 자유로운 상상과 꿈이 현실이 된다!

농협보다 큰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을 꿈꾸며..

감사합니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정의로운 전환의 공공성: 공공재생에너지 전략

— 위기를 줄이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공공성, 그 전략성과 필연성에 대하여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공공성을 다시 말해야 하는 이유

기후위기의 위험이 빠른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말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말 자체가 더 이상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술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온실가스 수치를 줄이는 것만으로 이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 전환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어는 단지 이상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전략적인 기준입니다.

공공성은 때로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처럼 들리곤 합니다. 공공성은 단지 ‘좋은 것’,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은 그러한 당위의 언어가 아니라, 실패한 기후 대응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기반입니다.

이것은 시장 기반의 전환이 만든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해, 사회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기후위기와 복합적인 사회적 불평등이 중첩되는 이 시대에, 사회의 존속은 결국 공공 자원을 어떻게 보호하고 통제하며 분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공공 자원의 왜곡된 흐름과 그 결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물, 전기, 세금 등 공공의 자원을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조건 없이 내어주고 있으며, 이를 ‘국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정부는 이 클러스터에 공공 인프라와 재정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공의 결정권은 사라지고, 그 자원은 ‘경제성장’이라는 명분 하에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고 있습니다.

결어로는 RE100,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이라는 언어가 사용되지만, 그 구조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공공의 자원이 공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위험의 구조에 있다

우리는 이쯤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목적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온실가스를 줄이려 하는 것일까요? 단지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는 위험을 줄이기보다 특정 계층이나 지역으로 전가하고, 오히려 전체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 자원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 자원들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순간,
그 예외는 결국 일상의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물, 전기, 주거, 돌봄, 교통, 의료, 교육... 우리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들에 하나둘 가격표가 붙고, 자격이 붙고, 시장 논리가 침투합니다. 공공성은 단지 자원의 소유 구조가 아니라, 사회가 누구를 중심에 두고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질문입니다. 공공이 설계하지 않는다면, 사적 이해가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위기 앞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지 날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의 핵심은, 이 위기를 감당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스템은 공동체 전체가 아닌, 소수의 이해관계에 맞춰 설계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의 조건

공공성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위험이 집단이 아닌 개인에게 떨어집니다. 자기만의 생존 전략을 세우고, 회복할 능력이 없으면 도태됩니다. 이 구조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을 고립시키고, 불안정한 삶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공공성을 중심에 둔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자원의 흐름을 설계하고, 결정하며, 함께 나누는 구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략적 공공성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갖습니다.

첫째, 자원의 공공적 소유입니다. 에너지 생산과 유통의 핵심 인프라는 공공이 소유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둘째, 민주적 통제와 운영입니다. 시민과 노동자, 지역 주체들이 전환의 방향을 결정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설계입니다. 위기를 줄이면서도 가장 취약한 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기술이 아닌 정치다

그 출발점 중 하나가 공공재생에너지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단지 에너지 전환의 기술이 아니라, 위험을 분산시키고 권력을 재구성하는 사회적 방식입니다. 단지 ‘무엇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감당하고, 누가 안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전환은 단순한 기술의 대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재구성, 권력의 재배분, 그리고 배제 없는 설계의 문제입니다.

에너지를 시장이 아닌 공공이 통제할 때,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때, 우리는 위기를 줄이고, 위기 속에서도 모두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술적 해법들을 접해왔습니다. CCS, RE100, 무탄소전원, 수소경제...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늘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 속에서 동원되었고, 결국 기후위기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공공성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고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실패를 보아왔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권한은 사유화되고, 수치는 관리되지만, 삶은 방치되는 전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잘못된 선택’이라기보다, 기본 설계가 틀린 구조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공공의 힘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 사회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존속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공공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 중심 전환의 구조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주체 중 하나는 정부입니다. 위기 대응은 선출 주기의 논리나 국회의 절충으로는 충분히 다뤄질 수 없습니다. 행정부는 장기적 기획과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전체 자원의 조정자로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회를 설계할 것인가, 누구에게 권한을 줄 것인가, 누구의 위험을 줄이고, 누구의 삶을 지킬 것인가.

공공성이 빠진 전환은 또다른 위기를 만들 뿐이며, 공공이 사라진 사회는 기후위기 이후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공공을 다시 설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입니다.